

연례정세보고서 2001

•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와 전망:  
2001 ~ 2002

통 일 연 구 원

- 목 차 -

요 약.....

I. 통일환경.....1

1. 동북아정세.....1

가. 동북아 안보환경.....1

나. 동북아 4국의 상호관계.....6

2. 한국의 주요 대외관계.....26

가. 한·미관계.....26

나. 한·중관계.....30

다. 한·일관계.....32

라. 한·러관계.....35

II. 북한정세.....40

1. 대내정세.....41

가. 정치동향.....41

나. 경제동향.....45

다. 사회동향.....51

라. 군사동향.....55

2. 주요 대외관계.....60

가. 북·미관계.....60

나. 북·중관계.....62

다. 북·일관계.....66

라. 북·러관계.....68

3. 대남동향.....71

III. 남북한 관계	78
1. 남북대화	78
가. 정상회담	78
나. 당국간 회담	80
2. 군사안보 분야	84
3. 교류·협력분야	87
가. 경제분야	87
나. 사회문화분야	93
4. 인도주의 사안	96
가. 이산가족문제	96
나. 남북자와 미송환 국군포로	100
다. 대북지원	102
라. 인권문제	106
<부록> 2001년도 주요 사건일지	110

## - 표 목 차 -

< 표 3-1 > 남북교역현황.....	89
< 표 3-2 > 남북한 비거래성 교역 현황.....	90
< 표 3-3 > 연도별 남북이산가족교류 현황.....	99
< 표 3-4 > 분야별 대북지원 개요.....	105
< 표 3-5 > 국제사회 지원액 대비.....	105

## I. 통일환경

### 1. 동북아정세

#### 가. 동북아 안보환경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은 자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지향해 왔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주도의 질서재편에 대응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경제적 이익이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력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더욱이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 일본과 함께 9. 11 미국테러사태이후 반테러 및 비대칭위협에 대비하는 협력체제에 동참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다.

동북아 역내 국가간의 정상회담은 안보와 번영을 위한 의지를 높이면서 새로운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환경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남·북관계와 미·북관계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분위기에서 크게 후퇴하고 있다.

#### (가) 미·일·중·러의 각축과 협력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위협이 증대되어 왔다는 판단 하에 미국은 유럽에 두었던 군사적 비중을 이 지역으로 돌림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미·일의 군사협력체제와 미국 주도의 패권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중·러의 협력체제로 양분화되어 진행되어 왔다.

미국과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방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면서 미·일 동맹을 근간으로 군사협력체제를 강화시켜 왔으

며, 신안보체제를 기본 축으로 군사동맹 및 폭넓은 안보협력을 추진해왔다. 테러사태이후 일본이 반테러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일 군사공조체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미·일, 한·미 안보동맹이 역내 안정의 초석이 아니라 위협요소라 여기면서 한·미·일의 입장과 배치되는 안보관을 보여왔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관계는 부시행정부 등장 이후 전략적 경쟁관계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관계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뒤흔들 수 있는 세력으로 간주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며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견제해왔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냉전시대의 대결적 자세를 버리고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하려 하는 한편, 러시아의 국내경제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 후원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와 함께 상호간 안보위협이 줄어 든 상태에서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비감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략적 파트너 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현실주의 외교와 패권주의를 지향하는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오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용납하지 않는 태도를 취해 왔다. 그러나 9. 11 테러사태를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는 탈레반 세력과 테러조직에 대한 주요 정보를 미국에 제공함으로써 미·중간, 미·러간 새로운 협력체제를 창출하고 있다.

한편 한·미·일은 정책조율과 함께 대북 공조체제를 진척시키면서 북한의 핵사찰,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강화를 추진하면서 북·중,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유대관계를 보다 돈독히 해오고 있다.

미국에 대한 9·11 테러사태를 계기로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미관계는 안보 분야의 협력강화를 통해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안보협력은 북한을 자극시킨바 있고, 미국은 반테러 정보 제공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 북한에 대해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와 테러 포기를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미·북관계는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테러사건 이후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비대칭 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협력체제가 형성되면서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한·미간 미·일간 공조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북·중간, 북·러간 군사협력관계로 진척되지 않으면서 미·중간, 미·러간 반테러 연대전선과 협력체제를 진전시키고 있어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테러사건 이전보다 안정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갈등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나) 미사일방어체제 추진과 핵무기 감축 합의

미·러는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안보전략과 함께 전략핵감축과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동북아 지역의 긍정적 안보환경 조성에 일조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명분을 상실하게 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북한, 이라크 등 이른바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및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지상, 해상, 공중 ‘미사일방어’(MD)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에 대해서 중·러가 강력히 반발해 왔

다. 중·러·한·일은 MD체제 구축이 미사일 확산과 군비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또는 유보의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러시아는 MD가 자국의 핵보복 능력을 약화시키고 세계전략 구도에서 러시아의 열세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면서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MD가 대만방어를 포함하고 있고 자국의 대륙간탄도탄미사일 위력을 무용화시킬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한국, 일본은 MD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했으나 동맹국의 안전도 포함되는 방어체제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미국의 정책을 고려해 일본은 호의적 입장으로 전환한 바 있으나, 한국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그 계획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한편, 그것이 동북아 안보와 미·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7. 14, 12. 3) 시행된 미사일 요격시험의 성공과 함께 MD체제 구축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다. 테러사태이후 미국에서는 MD정책이 본토 방위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으나, 부시 행정부는 “불량국가”와 테러조직들이 생화학무기를 탑재한 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MD를 추진해 왔다. 마침내 미국은 12. 13 ‘탄도탄 요격미사일(ABM)’ 협정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미국의 MD계획 추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번영 합의

동북아 지역에서 미·일·중·러가 정치군사적 대립·경쟁·협력을 보이는 와중에서도 경제적 실리 획득 차원에서는 서로 협력하는 태도를 보였다. 미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러



시아에 대해 경제적 지원에 나섰고 적극적으로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중국과 경제관계를 유지시켜 왔다. 미국 및 여러 국가들의 지원에 힘입어 중국은 2008년 북경올림픽 개최지로 결정(7. 13)되었고, 이어 WTO 가입안을 승인(11. 19) 받았다. 이로써 동북아 지역은 경제안보에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의 지속적인 교역에 크게 의존하면서 시장에 바탕을 둔 경제성장을 통해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한편 WTO는 제4차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를 공식 출범시켰고, 농산물, 서비스, 반덤핑 등 각 분야별로 세계무역질서를 규정하는 새로운 틀을 마련하였다. 동북아 지역 역시 WTO의 새로운 레짐에 동참하게 되었다. 중국은 WTO의 가입으로 동북아 및 세계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한편 관세인하, 시장개방, 경쟁체제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미국, 일본, 한국 등은 중국의 거대시장에 기대를 거는 동시에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할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 제9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0. 15~21)를 통해 동북아 관련국들은 세계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협력의 의지를 보이면서 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과 국제 테러로 인한 경제·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협력하기로 하였다. 2002년 동북아지역에서의 국가간 경제협력은 더욱 증진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의 지속적인 교역에 크게 의존하면서 시장에 바탕을 둔 경제성장을 꾀할 것이다. 한·중·일 3개국은 ASEAN 10개국과 함께 정치, 경제, 문화 및 기타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창설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나. 동북아 4국의 상호관계

### (가) 미·중관계

부시 행정부는 출범초기부터 미/중 관계를 경쟁적 관계로 설정함에 따라 양국관계는 급속도로 소원해졌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미사일방어 계획을 위해 러시아와 맺은 ABM 조약 개정 협상을 재개하고 여의치 않으면 ABM 조약 탈퇴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일본과의 동맹을 미국의 대아시아 안보의 중심 축으로 설정하였다. 2001년 4월 1일 미군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와의 충돌사건과 이에 따른 미국의 대대만 무기판매 결정 등으로 중·미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이 군용기 충돌사건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전반적으로 수용하였으나 양국간 안보문제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었다.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은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시(7. 15~7. 18)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고 양국간 협력확대 방안을 논하였다. 이 기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사일 방어체제는 전세계의 전략적 균형과 안정을 해칠 것”이라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추진을 비난하였다(7. 16).

또한 2001년 8월 24일 중·미 양국간 비확산 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제3국으로 확산하지 않기로 약속한 바 있으며 미국이 중국에 대해 MTCR을 준수하여 파키스탄이나 다른 나라에 미사일 기술 수출을 엄격히 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sup>1)</sup> 중국은 미국이 중국에게 미국 인공위성의 판매와 중국이

---

1) 중국은 최대 사거리1240마일에 이를 수 있는 샤헌 1호 및 샤헌 2호 미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제하기를 요구하는 등 양국간 비확산문제에 대해 이견이 지속되었다.

대만문제와 관련, 미국은 대만에 디젤잠수함 8척, 키드급 구축함 4척, P-3대잠 초계정 12대 등 약 5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였다(4. 24). 미국의 대대만 무기판매는 양국관계가 기본적으로 훼손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7개 기업이 대대만 디젤엔진급 잠수함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미 행정부가 중국과 맺은 3개의 컴퓨터 협정을 엄격히 준수하기를 강력히 요청하는(11. 21) 등 대만문제는 지속적으로 양국간 갈등을 지속시켰다.

2001년 4월 미정찰기와 중국 공군기 충돌사건에서 보여 준 중국의 태도는 대미 적대관계 조성은 결과적으로는 미·일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여 미국의 협상 요구에 응하였으며 미국 역시 중국과의 안보상의 갈등으로 인해 대중국 경제협력이 크게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기본 입장에서였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파월 미국무장관이 미국은 향후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우호관계 유지를 희망한다는 표명으로 이어졌다(7. 28~7. 29). 미국은 중국을 자국의 정상교역 대상 국가로(PNTR) 지정하고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2001. 9. 17)을 지지함으로써 양국간 경협관계가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0년도 중·미 양국간 교역은 통계상의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중국이 대미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중국의 통계 기준으로는 750억 달러, 미국의 통계 기준으로는 1,160억 달러에 달하였다.

---

사일 부품을 10차레이상 수출한 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The Washington Times, 2001. 8. 13.

미국의 대중 경협이 보다 활성화되는 데는 중국이 미국의 대테러 아프간 군사공격행위를 지지한 데 있다. 미국의 테러사태에 대해 중국이 즉각적인 위로 표명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행동을 지지함으로써 중·미 양국관계가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었다. 중국이 미국의 대테러 작전을 지지하는 배경에는 나름대로 자국의 국익과 관련이 있었다. 중국은 서부 신장지역에 있는 무슬림 분리주의자들을 경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2001년 10월 2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개국 정상회담에서 반테러 공동성명 채택에 참여하고 테러리즘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협력에 응할 것을 표명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미국 국민의 여론에 좋은 인상이 부각되었다. 부시 미대통령은 취임초기 자신이 설정하였던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경쟁자가 아닌 지역 강대국으로 존중할 것을 수정 표명함으로써 양국관계가 원만히 발전할 수 있음을 밝혔다. 그 동안 명시적인 지지만을 보여준 중국은 미핵전함인 USS John C. Stennis호가 홍콩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11. 24) 미국의 대테러 작전을 실질적으로 강력히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대테러 군사작전을 통해 파키스탄 및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영향권하에 있어 왔기 때문이다.

2002년도 중·미 양국은 경제문제에 있어 협력관계를 더욱 유지하면서도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美國의 미사일방어계획, 비확산, 대만문제 등으로 인해 양국관계는 소원한 관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 계획이 테러사태에도 불구하고 더욱 가시화되는 것을 우려할 것이며 미국의 미사일

망을 돌파할 수 있는 자국의 핵전력을 강화하고 러시아와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 (나) 미·일관계

부시 행정부가 출범(1. 20)한 후 미국은 국무부·국방부 등에 일본 전문가를 대거 포진시키고 일본과의 안보동맹을 강화해 오고 있다.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일본 외상은 미국을 방문(1. 25~28)하여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미·일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등에 합의하였다. 오키나와 미군 기지와 관련, 고노 외상은 후텐마 비행장 대체기지의 미군 사용기한 설정을 위한 협의를 제시하였으나, 파월 국무장관은 국제정세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기지사용에 대한 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며 기지주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한편, 주일 미군의 성추행 사건과 주일 미 해병대 사령관의 오키나와 지사에 대한 비난 발언으로 일본인들의 반미감정이 증폭되는 가운데 미 핵잠수함에 의해 일본 선박이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2. 10)하였다. 이에 부시 대통령과 럽스펠드 국방장관이 일본측에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조치를 적극 제시함으로써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였다.

부시 대통령과 모리 총리는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3. 20)하고 양국간 동맹관계 및 경제협력 강화를 재확인하였다. 모리 총리는 주일 미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일 안보협력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 대해서 양국정상은 MD체제가 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MD문제에 관한 일본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한 반면, 모리 총리는 미국의 입장을 이해한다고만 언급, 기존의 애매한 태도를 견지하였다. 대북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일 공조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나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화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하였다.

자민당 총재선거(4. 24)에서 개헌을 통한 자위대의 군대 인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 등 보수·우익성향의 공약을 제시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가 선출되었다. 고이즈미 내각이 출범(4. 26)한 이후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 및 유사법제 정비를 통한 안보태세 확립을 강조하였다. 아미티지 미국무부 부장관은 MD 설득외교의 일환으로 일본을 방문(5. 8)하여 미·일동맹을 현재의 미·영 동맹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이즈미 총리는 워싱턴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과 미·일 정상 회담을 개최(6. 30)하여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안보·경제 분야 차관급 협의기구 설치에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TMD 공동연구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고이즈미 총리는 MD에 대해서 이해한다며 동조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으나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였으며, 대북정책은 한·미·일 공조 체제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그후 콜린 파워 미 국무장관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 문제를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갈등으로 북한문제에 관한 한·미·일 3국 공조체제가 훼손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견해를 표명(7. 19)하였

다.

고이즈미 내각은 미·일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안보역할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위대 관련 유사법제를 정비하였다. 즉, 자위대의 PKF 참여허용 및 PKO 파병요건 간소화, 무기사용 제약 완화를 골자로 하는 PKO 협력법 개정안을 마련(9. 7)하였다. 미국에서 테러 참사사태가 발생하자 고이즈미 총리는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회담(9. 13)을 통해 미국의 테러조직에 대한 보복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후 고이즈미 총리는 미국을 방문하여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9. 25)하고 테러 근절을 위한 협력과 미군 지원을 위한 자위대 파견 방침을 표명하였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일본의 파키스탄에 대한 무상원조를 높이 평가하였다.

고이즈미 총리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이 본격화되자 난민 지원을 위한 경제원조 방안을 제시하고 전쟁이 종결되면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 적극 공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10. 22)하였다. 아울러 일본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계기로 자위대의 활동을 공해·비전투 외국영토로 확대, 자위대의 주일 미군기지 경비, 불법영해침입선박에 대한 사격 허용 등 대테러 특별조치법을 제정(10. 29)하였다. 그후 구축함 및 보급함을 인도양에 파견(11. 9)하여 정보수집 및 미군에 대한 연료·물자의 보급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2년 일본은 미국과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자위대의 활동영역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특히 해상자위대는 내년부터 이지스 호위함에 전역미사일방어(TMD)기능까지 구축하게 되어 전력이 급격히 증강될 것이다. 이와 같은 자위대의 전력증강 사업은 중국과의 군비경쟁을 자극하여 동북아 정세에

불안요소를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의 대북정책은 미·북관계의 진전에 연계되어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본은 미국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 노력하며 아프간 신 정부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할 것이다.

### (다) 미·러관계

부시 행정부가 출범(1. 20)한 직후 미국은 국무부내 러시아 담당 특별보좌관직을 폐지하는 등 러시아와의 관계를 격하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미·러관계는 경색되었다. 힘의 외교를 내세운 부시 행정부는 러시아가 ABM조약 개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MD체제 구축 강행하겠다고 공언한 반면, 러시아는 미국의 독단적이고 냉전적 사고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동등한 파트너십 관계를 요구하였다. 양국간 MD문제, 러시아의 대이란 무기수출, 미국의 대러 지원 축소 등으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미 국무부가 스파이 사건과 관련된 러시아 외교관 50명을 기피인물로 지정(3. 22)하여 추방하자 러시아도 미 외교관 4명을 추방하고 46명을 7월 1일까지 추가 출국토록 하는 등 맞대응함으로써 양국 관계는 갈등이 심화되었다.

양국간 외교적 마찰이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전방위 실리외교를 추구하고 있는 러시아는 미국과 대립보다는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MD체제 구축을 공식 선언하면서 핵무기 대폭 감축 및 ABM개정을 위한 러시아와의 사전 협의를 약속하자 러시아는 협상 가능성에 기대감을 표시



하였다. 이후 미·러 양국은 외무장관회담 등을 통하여 상호 이견을 조율하였다. 미국은 러시아에 조기경보 자료 공유, 공동 미사일 요격 훈련, 러시아제 S-300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구매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러시아는 미국의 ABM조약 탈퇴시 핵군축 관련 협정을 폐기하고 다탄두 핵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현실적인 힘의 한계를 고려하여 ABM 조약 개정을 위한 협상 개최에 합의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슬로베니아에서 개최(6. 16)한 미·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가 ‘적이 아닌 동반자’관계라고 주장하며 세계 안정과 번영을 위한 상호협력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미·러 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고위급 실무접촉을 확대하는 등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파월 국무장관과 이바노프 외무장관간에는 전화를 통해 양국 현안 및 국제현안을 긴밀히 논의하였고, 라이스 백악관안보담당 보좌관은 러시아 안보담당고문을 미국에 초청하여 미·러 정상회담시 합의한 군축·MD 문제 등 전략적 안정화 방안을 협의(6. 20)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은 러시아의 WTO 가입지지 입장을 천명하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협력을 약속하였다.

제네바 G-8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미·러 정상회담(7. 22)에서 양국 정상은 MD 구상과 핵무기 감축 문제를 연계해 협상하기로 합의하고, 미·러간 전략적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신전략안보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세계 정세 변화로 인해 협상이 필요해진 공격무기와 방어무기 처리문제에 대해 양국이 이미 상당부분 합의를 이루었다고 발표하였다. 그 후 양국은 전문가 회의(8. 7~8) 및 국방장관 회담을 통하여 전략적 안정화 문제, 공격용 무기(ICBM)

와 방어용 무기(MD)간 균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에 착수하였다. 미·러간 실무협상에서 미국 측은 핵무기 감축계획을 언급하였고, 러시아 측은 전략적 안정 형태가 종래의 상호 확증파괴에서 공격·방어무기간 균형에 입각한 억제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미국에서 테러사태가 발생한 직후 푸틴 대통령은 대국민연설을 통해 테러리즘을 반드시 응징해야 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단결할 것을 촉구(9. 11)하였다. 이바노프 외무장관은 미국을 방문(9. 19)하여 미국에 대한 테러관련 정보 제공 및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였다. 그후 미국의 영국 연합군이 아프간 보복공격을 개시하자 러시아는 영공개방 및 미군의 중앙아시아내 기지 사용을 용인하고 반탈레반 세력인 북부동맹에게 무기 등을 지원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반테러 국제연대가 형성됨에 따라 이를 미국 및 유럽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의 계기로 활용하고자 NATO 가입 문제를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파월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권리와 책임을 다 할 경우 NATO 가입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명(10. 3)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11. 12~15)하여 부시 대통령과 워싱턴과 텍사스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미·러 공동성명은 양국관계를 새로운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규정하고, 향후 10년간 전략핵 탄두를 2/3감축 1,700~2,200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표방하였다. 아울러 모든 정파·인종이 참여하는 아프간 연립정부 수립을 촉구한 UN결의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한편, 미 상원은 러시아의 반테러 전쟁 지원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에 협력하는 대가로 러시아

부채 37억달러를 탕감하는 법안을 승인(11. 14)하였다.

2002년 미국과 러시아는 ABM 협정 개정, 핵무기 감축 문제 등 신전략안보체제 구축 협상을 지속할 것이다. 미·러 양국은 협상의 기본방향에 합의하고 있는 바, 협상은 일정대로 진행되겠지만 상호 핵탄두 감축 규모, MD기술 공유 문제 등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NATO 가입 문제는 발칸반도 문제를 둘러싼 미·러간 갈등, 러시아 내부의 보수세력 반발 등 많은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내년에 실현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프가니스탄 신정부수립 문제에 대해 미국은 탈레반 온건파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탈레반 세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북부동맹이 주도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미국과의 협력 분위기를 훼손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영토에 미군기지를 구축하거나, 반테러 전쟁을 이라크 등으로 확대할 경우 양국간에 외교적 마찰이 증폭할 것이다. 미국은 현재까지 해외 미군기지 신설 및 전쟁 확대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바, 내년도 미·러관계는 전반적으로 갈등이 심화되기보다는 협력이 보다 증진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 (라) 중·러관계

중·러 양국은 3차의 정상회담과 다수의 고위급 인사 상호방문을 통해 미국의 MD체제 구축과 ABM 조약 개정 등 세계 안보문제 뿐만 아니라, ‘상하이 포럼’ 정기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문제에서 굳건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였다. 특히 향후 20년

간 양국관계를 규정하는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이 체결(7. 16)되었다. 또한 양국은 정치관계 발전에 상응하는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상하이 5개국’ 외무장관 회담에 참석차 모스크바를 방문(4. 27~31)한 탕자쉬엔 중국 외교부장은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7월 장쩌민 국가주석의 방러 준비를 점검하고 「중·러 선린우호협력 조약안에 대한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미국의 대대만 무기수출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간의 정치협력 강화와 군사협력 확대방안이 논의되었다.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6차 ‘상하이 5개국’ 정상회담(6. 14~15)은 우즈베키스탄을 6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시키고 ‘상하이 5개국’ 체제를 「상하이 협력기구」(SCO)로 개편하는 선언서를 채택하였다. 또한 「테러리즘과 분리주의 및 극단주의를 척결하기 위한 상하이 협정」이 서명되었고, 미·러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6개국 국방장관들은 미국의 MD에 반대하고 ABM 조약을 지지하는 별도의 성명서에 서명하였다.

푸틴 대통령이 2000년 7월 방중시 장쩌민 국가주석의 방러를 초청한 결과 중·러 정상회담이 모스크바에서 개최(7. 15~18)되어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과 「모스크바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중·소 우호동맹 및 원조조약」(1950. 2. 14)이 양국간 분쟁으로 1980년 자동 폐기된 이후 양국관계를 규정하는 조약이 없던 상태에서 ‘동등하고 신뢰있는 동반자관계 및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를 천명하고 포괄적 관계를 규정하는 신조약이 체결된 것이다. 또한 양국은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도 이것이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하였다. 공동선언에서는 ABM 조약이

전략적 안정의 초석임을 명시하고 신조약에도 언급했던 아무르강 유역의 영토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선언하였다.

푸틴 대통령과 장쩌민 국가주석은 상하이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에서 만나(10. 20)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체첸의 이슬람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공동대응, 『상하이 협력기구』의 역할과 기능 확대·발전, 중·러관계 발전 상황에 대한 만족 등에 합의하였다. 두 정상은 다른 국가들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전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군사작전에서 정치적 해결단계로 이행되는 등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남북한 등 71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 외무부에서 핵과 미사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세계 미사일기술 통제체제(GCS)’ 2차 전문가회의가 열렸다(2. 15). 북한측의 박영일 주러시아 공사 등 2명의 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했으나, 미국은 불참했다. 세르게예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모스크바를 방문한 장완넨 중국 중앙국방위원회 부주석을 만난 뒤 중·러는 NATO의 동진 및 NMD 체제 구축에 대해 ‘유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2. 21). 세르게예프 국방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한 조지 로버트슨 NATO 사무총장에게 유럽미사일방어체제를 제안한 것과 관련, 중국 주방자오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언론 브리핑(2. 22)에서 러시아의 제안이 전 세계 안정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중·러·북한 3국은 유엔군축위원회 연설(4. 10)을 통해 미국의 NMD 체제가 국제안보를 위협하고 새로운 군비경쟁을 야기하는 한편, 1972년 체결된 ABM 조약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중·러는 이러한 입장을 전술한 바와 같은 ‘상하이 5개국’ 정상회담과 모

스크바 양국 정상회담 및 상하이 APEC 정상회담에 앞서 가진 양국 정상회담(10. 20)에서도 견지하였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장쩌민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텍사스 미·러 정상회담(11. 12~14) 결과를 설명하였고, 양국 정상은 미국의 MD 계획과 관련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11. 19)하였다.

미국에 대한 테러사건 직후 「상하이 협력기구」 6개 회원국은 카자흐스탄 수도 알마아타에서 총리급 회담을 갖고 국제테러리즘 퇴치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9. 14)하였다. 푸틴 대통령과 장쩌민 국가주석은 전화통화(9. 18)에서 대테러 국제기구 창설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미·중·러 3국은 테러와의 장기전쟁에서 유엔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발언(9. 24)을 지지하였다. 그동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극단주의자들에게 정부전복 등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집단차원의 대응조치를 희망하여 왔다. 이에 따라서 「상하이 협력기구」는 키르기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회동(10. 11)하고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보복공격 이후의 지역안보 문제와 지역테러 방지센터 발족 등 현안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중·러 양국 정상은 상하이 APEC 정상회담에 앞서 가진 개별 정상회담(10. 20)에서 테러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 협조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아프가니스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촉구하였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축출되면 광범위한 대표성을 지닌 거국 연립정부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중·러는 이를 지지하고 있다.

중·러 양국간 군사협력과 관련, 중국은 1997년 10억달러 상당의 소브르메니급 구축함 2척을 러시아에 주문한 바 있고, 첫 번째 구축함은 2000년 12월 중국 동해함대에 편입되었다. 러시

아는 나머지 한 척을 2001년 1월중에 중국에 인도하였다. 카시야노프 러시아 총리는 방러 중인 장완넨 부주석을 만나 동부 국경지대에 요격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군사장비 공급에 대한 중국의 결제방법 등 양국간 군사기술 협력에 따른 경제적 문제들을 논의(2. 21)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중·미 군용기 충돌사건 이후 정찰능력 제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러시아의 지원으로 3개 전구(戰區)와 전략지역에 TU-154M 정찰기를 배치할 방침을 세웠다.

7월 중·러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20억달러 상당의 러시아 최신예 전투기 SU-30MKK 38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최신형 민항기 투폴레프 TU-204, TU-214, 일류신(II)-96-300 등의 구매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 전투기 SU-27기 200대를 대량 면허 생산할 준비를 갖추었다. 이에 따라서 미국 등 서방측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증가했다고 평가하였다. 베이징에서 개최된 「상하이 협력기구」 국경 군축회의에 참석중인 러시아 무기감축 담당 대표는 “1996~97년 체결된 중·러 국경무기 감축 합의에 따라 군대를 철수시키고 있으며, 러시아는 극동 러시아~중국 국경 100km 안에 배치된 무기를 대폭 감축했다”고 밝혔다(11. 10).

경제면에서 중·러 양국은 교역 및 에너지와 민항기 분야에서 협력의 증진시켰다. 2000년 양국간 교역은 80억달러이었던으나 2001년에는 100억달러 선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교역과 관광교류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2000년 11월 중국 하얼빈과 러시아의 우수리스크를 연결하는 첫 번째 버스노선을 개설한 바 있다. 금년에 중국의 북동지역 항구도시 자무시(佳木斯)와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로비트잔을 연결하는 두 번째 버스

노선이 개통(1. 16)되었다.

양국의 정치관계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에너지 분야의 협력이 본격화되었다. 양국 기업들은 공사비가 총 60억 달러에 달하는 러시아 야쿠티아 지역과 중국 북서부를 잇는 3,000km 가스관 설치 계획을 2월 협의하였다. 7월 중·러 정상회담에서는 석유, 가스, 알루미늄, 민항기 분야에서의 협력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고 시베리아와 중국 동북부를 잇는 2,400km의 송유관 건설사업이 합의되었다.

주룽지 중국 총리가 130여명의 대규모 수행단원을 이끌고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방문(9. 7~11), 카시아노프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교역 증진 방안을 협의하였다. 중·러 총리 회담에서는 양국간 원유 파이프라인 및 가스관 건설, 러시아제 투폴레프(TU)-204여객기 5대 도입, 핵에너지 이용 협력, 러시아의 대중 수출 확대, 중국 기업의 러시아 통신시설 개선 지원, 양국간 교육·관광·문화 분야 협력 확대 등에 관한 7개 협약이 조인(9. 8)되었다. 중국은 미국 보잉사 여객기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여객기 판매는 민항기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2년에도 중·러 양국은 미국의 MD 계획과 대테러 전쟁 등 국제안보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쩌민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부시 미 대통령과의 양자간 정상회담 직전 사전협의하고 회담 직후 그 결과를 설명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견제하고자 할 것이다. 중·러 양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질서회복에 미국 주도보다는 유엔 주도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상하이 5개국’ 정상회의가 우즈베키스탄의 가입을 통해 2001년부터



「상하이 협력기구」로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중·러 양국은 중앙 아시아 지역의 국제테러와 마약, 무기밀수를 방지하고 이 지역 에너지 자원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데 더욱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제 첨단 구축함 2척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소브레메니급 구축함 2척 이상을 2년 내에 구매하고 최신예 전투기 SU-30 38대를 2003년까지 인도받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해·공군력은 대폭 증강될 것이다. 이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수출을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중·러 양국은 정치·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100억달러를 넘어선 교역과 교육 및 관광 분야에서도 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1년 양국 정상 및 총리 회담에서 합의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와 운송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가 예상되며,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도 전망된다.

#### (마) 일·중관계

일·중 양국은 2001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8. 14)등으로 최악의 국면을 맞이 하였으나 양국의 정상회담(10. 8) 등으로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일본에서는 2002년부터 중학교에서 사용하게 될 8종이 새 역사교과서가 2001년 4월 3일 검정을 통과함으로써 역사왜곡 논란이 빚어졌었다. 그 중에서도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1997. 1 결성)이 중심이 되어 만든 새 교과서가 황국사관적(皇國史觀的) 민족주의에 기울어 중국 등 관련 국가의 역사를 심하게 왜곡하고 있어 비판의 표적이 되었다. 또 다른 역사교과

서들도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진출’로 바꾼 점등이 문제가 되었다.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의 북경지부 기관지인 ‘北京青年報’는 8월 16일 과거의 침략 역사를 거부하는 일본의 반성결핍증을 분석하면서, “일본민족은 이성적 사고와 반성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또 자신의 독자적인 찬란한 역사문화가 결핍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유일하게 ‘화려한 역사’를 부정하지 못하고, 국가와 정부를 쉽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고이즈미 총리가 8월 14일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하는 것은 일제 침략을 정당화하고 일본의 우경화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중국은 비판하였다. A급전범 위패가 안치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참배는 교과서 문제와 비견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중국을 방문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일본 총리는 10월 8일 중국의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 주룽지(朱鎔基)총리와 잇따라 회담하고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는 2002년의 신사참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고이즈미 총리의 중국방문은 양국의 선린우호 및 ‘아시아경시’라는 이미지를 벗고 일·중 관계를 강화한다는 의도로 보인다.

경제문제와 관련, 일본정부는 국내경기침체에 불구, 대규모 대중 ODA를 제공하는데 대한 비난이 고조되자, 외무성이 새로운 ‘대중 ODA 지원계획’을 마련(6. 4)하고 재무성도 2002년도 ODA예산의 전년대비 10%삭감 방침을 결정, ‘중국도 예외일수 없다’는 입장하에 신규차관의 대폭삭감 방침을 정하고 삭감규모를 검토 중에 있다.

아세안(동남아 국가연합)+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브루나이를 김대중 대통령 주룽지 중국·고이즈미 일본총리가 방문하여 11월 5일 한·중·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아세아+한·중·일 정상회의는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및 ‘동아시아포럼’ 창설 문제를 연구과제로 채택, 내년 회의에 공식 의제로 상정키로 했다.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안은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나 유럽연합(EU)에 상응할 만한 아시아지역 협력체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안보문제와 관련, 일본의 2001년 방위백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러시아간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룹’간에 이해 대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중국은 공군을 현대화하는 동시에 해양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강한 경계심을 보였다.

미국의 일본중시 및 중국견제 전략에 따라서 일본자위대의 방위전략이 구소련을 주적개념으로 한 ‘북방방위’에서 중국을 겨냥한 ‘남방방위’로 변화하였다. 일본정부·자민당은 당초 2005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던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2년 앞당겨 작성하기로 한데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 및 대만해협의 불안정 그리고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 증가등 급격한 정세변화에 따른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다. 일본은 자위대의 주력군을 북방에서 규슈·오키나와 등 남방지역으로 이동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02년 새로 건조되는 이지스 호위함은 중국과 북한의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교도(京都)의 마이즈루(舞鶴) 기지와 나가사키현의 사세보(左世保)기지에 각각 배치할 계획이다. 중국은 2001년 국방예산을 작년보다 17% 늘이는 등 군비확대를 지속하고 있다고 일본 방위백서(2001)는 처음으로 명시

하였다.

장쩌민 주석은 10월 9일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일간의 긴장 국면이 완화됐다”고 말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로 악화됐던 양국 관계가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역사 교과서 및 신사참배 문제 등과 관련, 일·중정상회담에서 별다른 합의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중국은 일본이 이러한 문제를 피해가려는 의도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 왜곡, 신사참배 문제 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2002년에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江주석은 미국의 후방지원을 위한 자위대 해외 파견에 대해 아시아인들은 우려하고 있다며 경계감을 표출(10. 9)하였다.

또한 일본의 새로운 방위계획은 부시 행정부의 중국견제전략이나 일본우익세력의 중국 위협론과 맞물린 것으로 중국을 자극하고 동북아 정세에 새로운 불안요소를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바) 일·러관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 참석한 고이즈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0월 21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푸틴 대통령에게 “4개섬 가운데 하보마이(齒舞)·시코탄(色丹)에 대해서 반환협상을, 구나시리(國後)와 에토로후에 대해서 귀속협상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고이즈미 총리의 제안은 지난 3월 25일 모리 요시로 전 총리와

푸틴이 합의한 내용을 계승한 것이다. 일본과 옛 소련은 1956년 하보마이와 시코탄의 일본 반환을 합의했다.

경제협력 문제와 관련, 2000년 일·러간 교역량이 러시아 총 교역량의 5%에도 못 미치고 올해 일본의 대러 투자도 미미한 수준에 불과, 무역촉진 및 투자확대 문제가 양국의 관심사였다.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유전·가스田 개발, 러시아본토~사할린~일본을 연결하는 해저터널·철도망건설 계획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WTO 가입 등 자국경제의 국제질서 편입을 위한 일본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사항이다.

미·일간 안보문제와 관련, 미·일간 TMD 공동 개발에 대해 러시아가 「TMD 등 극소수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구축되는 미사일 방어 계획에 결사 반대한다」(2000. 11 「세르게예프」 국방장관)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양국간 마찰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한편 러시아는 핵무기에서 나온 플루토늄 및 노후 핵잠수함 처리를 위한 협력을 일본측에 요청하고 있으며 일본은 러시아 핵폐기물의 일본해 투기 방지를 위해 러시아측에 「해양오염 방지 조약」 가입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꽁치 조업권 허가와 관련, 일본과 러시아가 2002년부터 쿠릴 열도 남부 수역에서 한국 등 제3국의 조업을 금지하는 문제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10월 15일 방한해 김대중 대통령과 양국간 고위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꽁치 조업 문제를 해결기로 합의함에 따라 일본 정부가 러시아와 최종 합의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러시아의 허가를 받은 한국의 꽁치잡이가 남쿠릴열도(북방영토)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해친다는 차원에서 한국과 마찰을 빚어

왔다.

앞으로 일·러 관계는 일본이 10월 21일 회담을 계기로 하보마이·사코탄 2개섬 반환을 인정받았다고 간주하고 대러 협상에 진력해 나갈 것이나, 러시아측이 그간 거둬들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협상에서는 소극적 자세를 반복해왔다는 점에서 북방영토 반환의 급격한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2. 한국의 주요 대외관계

### 가. 한·미관계

2001년도의 한·미관계는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과 관련한 정책조율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 전 한국을 방문한 공화당의 본드(Christopher Bond) 상원의원을 통한 메시지 전달(1. 12)과 취임 후 김대중 대통령과의 전화통화(1. 25)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였다. 이정빈 외교장관과 파워(Colin L. Powell) 국무장관은 부시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외무장관회담을 워싱턴에서 개최(2. 7)하여 정치, 경제, 안보 면에서 양국의 동반자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대북정책 조율 등 양국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임동원 국가정보원장도 2월중에 미국을 방문하여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부시 행정부의 고위 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미간 갈등설이 한국과 미국의 주요 언론에 등장하였으며, 한·러 정상회담(서울, 2.27)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조약(ABM

Treaty)의 보존과 강화' 내용이 들어감에 따라 부시 미행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 구축과 관련, 한미간의 갈등설이 부각되기도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공식실무방문(Official Working Visit)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워싱턴, 3. 8)을 갖고 대북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남북 화해협력의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안정 기여,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 및 김대중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지시, 제네바합의 유지, 한·미·일 정책 공조 유지 등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음을 표명하고, 향후 북한과의 합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강조하였다. 3월 26일 한·미·일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첫 3자 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대북정책에 관하여 조율하였다. 4월 26일에는 한국의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미국의 주한대사와 한미연합사령관이 참여하는 한미 외교·안보 고위협의회(2+2 회의)를 갖고, 남북관계 상황, 개정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운영방안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5월에는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을 설명하기 위해 아미티지(Richard Armitage) 국무부차관과 켈리(James Kelly) 동·아태차관보를 서울에 파견한 기회에 김대중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5.9)하여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를 재표명하고,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과정에서 한국의 견해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어 한·미·일 TCOG 회의가 하와이에서 개최되어 대북정책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내부적인 정책검토와 한국 및 일본과의 정책협의를 마친 부시 행정부는 6월 6일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선언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재개를 선언하면서 제네바합의의 이행 개선, 북한 미사일계획의 검증 가능한 규제 및 미사일 수출 금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태

세 등을 협상의제로 제시하였다. 한미 외무장관은 워싱턴에서 회담을 개최(6. 7)하고 부시 대통령의 대북 대화재개 선언 내용과 관련하여 상호의 입장을 교환하였다. 켈리 차관보는 6월 12일 미 하원국제관계 위원회 동아태 소위 청문회에서 4자회담이 정전협정의 대체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실질적인 場”이라고 지적하였다. 6월 21일 서울에서 개최된 김동신 국방장관과 럼스펠드(Donald Rumsfeld) 미 국방장관간의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 문제와 관련,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대처해 나가기로 하고, 북한도 재래식 군사력 분야에서 신뢰구축조치를 실천할 것을 촉구하였다. 같은 시기 서울을 방문한 체니(Richard Cheney) 부통령은 김동신 국방장관과의 환담(6. 22)시 미국이 한미동맹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계속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파월 국무장관은 7월 27일 재래식 전력문제가 미국의 어젠다이지만, 미국은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파월은 또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미국과의 대화재개와 남한 답방을 촉구할 것을 언급했다. 7월 하순에 열린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 참여국들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하였다. 미국은 8월 9일에도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것임을 재강조하였다.

미국에서 9. 11 테러가 발생하자 한국은 미국의 대테러전쟁 수행으로 북·미대화의 재개 전망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였다. 9월초 한·미·일 TCOG 회의가 열려 남북대화 재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실현 등을 강조하였다. 9.11 대미테러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한국은 미국의 어떠한 조치에도 지지할 것임을 표명했으며, 9월 16일 개최된 5차 장관급회담에서 남북한 공동의 반테러공동선언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테러사태 발생 이후 주한미군기지와 미국 관련 시설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었다. 9. 11 테러사태 발생 이후 한국은 미국과의 단합



을 보여주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도움을 미국에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국가안보회의는 의료, 수송 등 비전투지원을 즉각 결정하였다.

한편 경제면에서 미국 경제의 하강국면 진입은 남한 경제의 회복에도 영향을 미쳐, 2001년도의 대미 수출은 2000년도에 비해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8월 18일 한국정부는 미국 연방항공청이 한국의 비행안전등급을 B등급으로 조정하였음을 발표하였다. 2001년도의 경제성장률은 연초 정부의 4~5% 성장 예상과는 달리 2.8% 이하로 예상되며, 2002년도에는 5% 미만 정도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2년도의 경제성장률 예상은 2002년도 상반기 중 미국의 경제가 안정화되고 성장할 것이라는 전제에 입각한 것이다.

2002년에는 미 부시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대테러전쟁이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대북협상 의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정리가 북·미 협상의 진전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한·미간 대북정책과 관련한 이해의 접근 또는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2002년도 한·미관계의 중요 변수는 한국의 국내정치가 될 것이다. 2002년도에는 한국이 대통령 선거정국에 들어섬에 따라서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선거 운동의 쟁점으로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며, 남북간에 새로운 획기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반면, 김대중 대통령은 북·미관계의 진전을 계속 촉구할 것이기 때문에 한·미간 대북정책과 관련 긴장이 발생할 수도 있다.

## 나. 한·중관계

2001년도 한·중 관계는 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 점진적인 발

전을 보였다. 특히 중국이 한국의 대북 정책방향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한·중 간 무역 및 투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 참여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임으로써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중국 측의 폭넓은 지지를 얻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에 대해 “우리는 부시 대통령의 지도력을 신뢰하는 바이며 미국정부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동맹국 및 관련국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체해나가기 바란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으며(3. 2) 곧 이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개발과 재래식 무기 감축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3. 7) 한반도 안정을 최우선 시하는 중국 측의 입장과 같이하였다.

다이빙귀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이만섭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북한은 한국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남북한간 관계발전을 귀중히 여기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4. 10) 남북관계가 진전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 국제방송을 통해 “남북관계가 부단히 개선되고 있으나 조선반도의 화해는 여전히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미행정부가 주한미군을 동원하여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하는 것은 기필코 조선반도의 안전과 안정에 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하였다(4. 19).

2001년도 한·중 양국간 여러 분야의 고위급 인사의 상호 방문은 점차적으로 확대되었다. 5월에 리평(李鵬)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방한하였으며(5. 23~5. 27) 6월에는 이한동 국무총리가 訪中하였으며(6. 19~6. 22) 이에 대한 답방으로 주룽지 중국 총리가 10월에 방한하였다. 특히 금년은 제12차 한·중 정

상회담을 개최한 해로 김대중 대통령이 APEC 정상회담차 상하이를 방문하여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10. 18~10. 22) 양국간 당과 정부간 협력이 확대되었다. 한·중 양국간 군 고위층의 상호방문도 점차적으로 확대되었다. 군 관련 고위층 인사의 상호 방문으로는 2001년 2월 길형보 육군 참모총장의 방중과(2. 28~3. 4) 劉順堯 중국 空軍司飭員 上將의 3월 방한이었다. 길형보 육참총장의 방중은 2000년 8월 조영길 합참의장의 방중 다음으로 최고위급 군인사 방중이며 중국으로서는 2000년 1월 遲浩田 중국 국방장관의 방한이후 2001년에는 劉順堯 上將의 방한이었다. 2001년 10월 한국해군 함대가 최초로 상해를 방문하였으며 주룽지(朱鎔基) 중국 총리 訪韓시 양국간 군함 상호방문에 합의하였다. 중국 측 함대의 한국방문은 내년에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8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 회의에서 한승수 외교통상부장은 탕자쉬엔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남북간의 대화권고와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중요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ARF의장 성명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였다(7. 24~7. 25).

2000년 말 한·중 양국은 서로 제3대 교역국의 위치를 확보하였으며 중국은 한국의 제2대 투자 대상국으로 투자액은 약 78억 달러에 달하였다. 2000년 말 한·중 양국은 약 149만 명이 상호 왕래를 하였으며 그 중 한국인의 방중은 약 103만 명이며 중국인의 방한은 약 46만 명에 달하였으며 2001년도 상호 방문 수는 더욱 확대되었다. 2002년 월드컵 행사로 인한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 수는 1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2002년 중국인의 방한 수는 크게 증가될 것이다.

2002년 한·중 양국은 주한미군문제와 북한의 미사일문제에 대해 입장을 같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2002년에도 북한과 함께 미국의 미사일방어 계획이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긴장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비난할 것으로 보이나,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개발문제와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해 이견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원치 않을 것이며,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경우에도 이에 동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에도 중국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존재문제는 궁극적으로 한·미 양국간에 결정될 사안으로 판단할 것이다.

#### 다. 한·일관계

한·일 양국은 2001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8. 14) 및 남쿠릴열도 수역 어업분쟁 등으로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였으나, 양국의 정상회담으로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일본에서는 2002년부터 중학교에서 사용하게 될 8종의 새 역사교과서가 2001년 4월 3일 검정을 통과함으로써 역사왜곡 논란이 빚어졌었다. 그 중에서도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1997. 1 결성)이 중심이 되어 만든 새 교과서가 황국사관적(皇國史觀的) 민족주의에 기울어 한국 등 관련 국가의 역사를 심하게 왜곡하고 있어 비판의 표적이 되었다. 또다른 역사교과서들도 군대위안부에 관한 기술을 삭제하고,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진출’로 바꾼 점등이 문제가 되었다.

고이즈미 총리가 8월 14일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하는

것은 일제 침략을 정당화하고 일본의 우경화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한국은 비판하였다. A급전범 위패가 안치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참배는 교과서 문제와 비견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일본은 남쿠릴열도의 쫄치조업과 관련, 러시아의 허가를 받은 한국의 쫄치잡이는 남쿠릴열도(북방영토)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해친다는 차원에서 한국과 마찰을 빚었다.

한국정부는 한·일 역사인식과 관련,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가 없는 한 정상회담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환경의 변화 (남북대화의 재개, 미국의 테러참사, 월드컵 협조 등)를 내세워 일본측이 제의한 정상회담(10. 15)을 받아 들었다.

우선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던 역사 공동 연구를 합의(10. 15)하였으며, 또한 10월 20일 상하이에서 개최된 APEC(아·태경제협력체)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정부가 이 연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일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서도 일본측은 10월 15일의 정상회담에서 밝힌 ‘새 참배장소 건설검토’하기로 하였으나 10월 20일 정상회담에서는 이것을 위해 연내에 연구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쫄치조업문제와 관련, 일본이 러시아와 서둘러 최종합의를 하기보다는 한국측과 더 협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세안(동남아 국가연합) +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브루나이를 김대중 대통령 주룽지 중국·고이즈미 일본총리가 방문하여 11월 5일 한·중·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는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및 ‘동아시아포럼’창설 문제를 연

구과제로 채택, 내년 회의에 공식의제 상정키로 했다.

한·일 관계의 2002년 전망은 다음과 같다. 고이즈미 총리는 2001년에 다시 방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연말까지 구조개혁 및 예산편성작업이 예정되어 있어 2002년에 방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재방문은 ‘미국중시’, ‘아시아경시’라는 이미지를 벗고 한·일, 중·일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국은 고이즈미 총리가 재방문할 경우 양국간의 투자협정 서명을 비롯하여 항공기 증편, 월드컵 기간중 한국인의 일본입국사증면제 추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한다는 것이다. 오기 지카케(扇千景) 일본국토 교통상은 한국민에 대한 비자발급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며, 서울~하네다간 셔틀여객기 취항문제와 일본의 對한 투자확대 등의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세아(동남아국가연합)+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김대중대통령은 기조연설(11. 5)을 통해 동아시아 정상회의 창설과 함께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와 ‘동아시아 포럼’ 설치를 제안했다. 대통령의 제안은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의 협의를 거친 뒤 2002년 프놈펜회의에서 구체적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일 정상회담(2001)에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및 남쿠릴열도 주역 어업 분쟁으로 최악의 국면을 맞았던 양국 관계는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별다른 협의를 못하고 ‘공동연구를 양국정부가 지원한다’는 수준에서 결말을 보았다. 한국의 학자들은 일본의 피해당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역사왜곡을 피해가려는 의도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왜곡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

우 2002년에 일본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 라. 한·러관계

김대중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울 정상회담을 통해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를 천명하였다. 2001년에는 러시아 고위인사들이 잇따라 서울을 방문하였고, 한·러 양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러 결과와 양국간 경협에 관해 집중 협의하였다. 러시아는 군사무기 판매와 TSR-TKR 연결 사업에 큰 관심을 표명하였다.

한·러 양국의 이해일치로 푸틴 대통령이 옐친 전 대통령의 방한(1992. 11) 이후 러시아연방 대통령으로는 두 번째로, 8년 만에 방한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2. 27)을 개최하고 7개항으로 된 「한·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정상회담의 의의는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 심화,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 테러와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등 국제안보 문제에 대한 인식공유, 양자간 및 남북한·러시아 3각 경협의 증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만섭 국회의장은 러시아를 방문하여 셀레즈노프 하원의장, 스트로예프 상원의장 등 러시아 정계 지도자들과 연쇄회담(5. 15)을 가졌다.

그는 “이르쿠츠크 가스전 파이프라인의 북한 통과 등 3국 경협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3국 국회차원의 지원협력 방안이 긴급하다”며 러시아 의회에 남북한과 러시아 3국 국회회담의 조속한 주선을 공식 요청했다. 라미쉬빌리 주한 러시아대사는

신임 인사차 민주당을 방문(8. 13)하여 “러시아는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남북한관계에 중개자 역할을 함으로써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경제실익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러 양국은 모스크바에서 정책협의회(9. 25~27)를 개최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러 후속조치 및 남북장관급 회담 개최에 따른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또한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러시아 외교아카데미」와 제3차 한·러포럼을 모스크바에서 개최(9. 27~28)하고 북·러관계, TSR-TKR 연결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상하이 APEC 정상회담(10. 20~21)에서 한·러 양국 정상은 한반도문제와 콩치분쟁, 경제협력 방안 등 양국 공동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러 결과를 청취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러시아측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안보면에서, 양국 대통령은 서울 정상회담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 동북아 다자대화의 실현, CTBT의 조기발효 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양국은 ABM 조약이 전략적 안정의 초석이라는 데 동의하는 한편, ABM 조약의 보존·강화, START II의 조기발효와 완전한 이행, START III의 조속한 체결을 희망하였다. 「한·러 공동성명」에 ‘ABM 조약을 보존하고 강화’란 문구가 포함된 것과 관련, 미국이 추진 중인 NMD 체제를 비판 또는 반대하고 있다고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야기되었다. 「디펜스 뉴스」 보도(4. 16)에 의하면 미국의 무기제조업체들이 한국 군수무기 시장에서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유럽과 일본 및



러시아 무기제조업체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한국 군수무기 시장을 파고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입찰을 실시하고 있는 전투용 헬기 사업규모는 18억달러 상당(40대)인데 러시아가 카모프(Ka)-52 헬기에 대한 판매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러 양국은 서울에서 제6차 국방정책 실무회의를 개최(10. 8)하고 미국의 테러사건 이후 국제 및 한반도 안보정세 등을 논의하였다. 우리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러 이후 북·러 군사협력 동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북·러간 무기거래 문제가 ①한반도 평화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선 안되고, ②한·러 우호관계에 손상을 주지 않으며, ③투명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은 고려대 특강(11. 19)에서 “한반도 통일의 대외상황 해결을 위해 남북한과 미·러·중·일이 참여하는 6자회담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며 그 이후에 더 폭넓은 문제를 다루는 동북아 대화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면에서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3차 「한·러 경제·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2. 26)가 개최되었다. 러시아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 기구로서 「한·러 극동 및 시베리아 분과위원회」와 남북한 철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을 위한 「한·러 교통협력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러 정상회담 결과 “양측은 무역과 투자, 에너지와 자원, 산업, 중소기업, 과학기술, 정보기술과 통신, 어업, 해운, 항공, 철도, 환경, 관광 및 지역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정상은 또한 나훗카 자유경제지역내 한·러 산업공단 건설사업의 조속

하고 성공적인 이행, 이르쿠츠크(코비크타) 가스전과 사할린 석유·가스 개발사업에 관한 긴밀한 협력 등에 합의하였다. 양국 정상은 남북한 관계의 긍정적인 진전이 남북한과 러시아간 3각경협에 대한 호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에너지와 자원 및 TKR과 TSR의 연결사업을 이행하는데 노력하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세계 경제체제로의 본격적인 편입을 지지하였다.

러시아를 방문한 이만섭 국회의장은 3국경협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3국 국회차원의 지원협력, 나훗카 한·러 공단건설 협정에 대한 러시아 의회의 조기 비준을 요청(5. 15)했다. 러시아 측은 철도연결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한국측의 적극성을 주문했다. TSR-TKR 연결사업 타당성 조사차 러시아를 방문한 손학래 철도청장은 철도연결 사업을 위해 양국간 교통협력위원회와 철도대표부 설치, 철도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9. 4)하였다. 발라킨 대외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러시아 철도 대표단이 방한 한·러 교통협력위원회의 연내 설치에 합의(10. 11)하였다. 한국을 방문한 폴리코프스키 러시아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리인은 TSR-TKR 연결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의 대러차관 상계방식 투자에 대해 “한국의 결정에 달려있다”면서 “차관을 얻기 위해 세계금융기구를 통해 논의할 준비도 되어 있다”고 말했다(10. 16). 이는 러시아가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자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양국은 야쿠티아~아무르~중국을 잇는 가스관 건설, 사할린 가스전 개발, 철도연결 문제, 나훗카 공단 문제, 3각경협 방안, 남쿠릴 조업 문제 등을 협의했다.

한·러 양국간에는 중요한 정치적 현안이 없기 때문에 2002년

에는 안보·군사 및 경제면에서 고위인사 교류와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탈레반에 대한 국제적 보복전쟁이 종료되면 미·러간에는 MD와 ABM 조약 문제로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고, 이 때 러시아는 한국 정부에 미국의 MD 계획에 대한 비참여, ABM 조약의 보존·유지라는 자신의 정책을 지지하도록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정부가 현재와 같은 중립적 입장을 취하도록 희망할 것이다. 또한 군사무기 판매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는 Ka-52 헬기, S-300 지대공 미사일, SU-35 전투기 등의 구매를 한국측에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 군사무기 판매대금을 경협차관 미상환분(약 18억달러)으로 상계하는 방안을 선호할 것이다.

전반적인 러시아 경제의 회복추세와 한국의 수입수요 증가에 따라서 2002년 양국간 교역은 그동안 최고치인 1996년 수준(약 3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1999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대러 무역적자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가 열성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TSR-TKR 연결문제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1년 한·러 및 북·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철도연결에 대비, 한국 정부는 1956년 창설되어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간 국제철도운송협력기구」(OSJD)에 가입 신청서를 2002년 낼 방침이다. 한국은 현재 이 기구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의결권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TSR에 대한 발언권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아시아 횡단철도 북부노선의 컨테이너 시범운송 사업을 위해 한·러·몽골·카자흐스탄간에 조정위원회가 설치돼 2002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 II. 북한정세

### 1. 대내정세

#### 가. 정치동향

북한은 1997년이후 계속되어온 ‘선군정치방식’의 고수를 다짐하는 가운데, ‘신사고’를 강조하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하였다. 『신년공동사설』에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투쟁기풍과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이룩해 나가는 것은 우리 앞에 나선 선차적인 과업이다”고 강조한 데 이어,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높이에서 보고 풀어 나가야 한다”(『로동신문』 1. 4)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낡고 뒤떨어진 것들을 깨끗이 떨어버리고 사상관점과 사고방식도, 일본새와 생활기풍도 근본적으로 일신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사색하고 새롭게 실천해야 한다.”(『로동신문』 1. 9)고 하였다.

새로이 선보인 ‘신사고’는 지난 10년간 지속되는 만성적인 경제난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경제회생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신뢰감이 낮아졌으며, 사상사업에 대한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상 동향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본 것이다. 즉 북한은 사상만으로는 체제유지가 보장되지 않으며 경제회생 없이는 사상도 유지될 수 없다고 인식한 것이다.

전반적 국가 전략 차원에서 볼 때, 2001년도 북한은 정치적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경제회생에 대한 강한 의욕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01년 북한정치 분야의 특징적 모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일이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한 해로 평가될 수 있다. 대외적으로 북·중, 북·러 정상회담을 가졌고, 대내적으로도 어느 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김정일의 공개활동은 12월 20일 현재 대내적으로 총 92회로 나타났다. 김정일의 공개활동이 2000년 73회, 1999년 69회, 1998년 70회였음을 볼 때, 2001년은 가장 활발한 공개활동의 해로 평가할 수 있다. 총 대내활동중 거의 절반인 46회를 군 관련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1998년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던 군 관련 행사 참여가 금년에는 다시 증가하였다(군관련 행사참여 횟수는 2000년 21회, 1999년 41회, 1998년 49회). 한편, 경제관련 행사는 예년 수준인 총 19회 참여했다(경제관련 행사참여 횟수는 2000년 25회, 1999년 23회, 1998년 11회).

2. 16은 김정일의 59회 생일이었다. 2001년도 생일관련 행사는 행사 규모나 내용에 있어서 예년수준을 유지하였다. 북한은 21세기에 맞는 첫 생일임을 강조하면서 그의 업적과 위대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충성심 제고에 역점을 두었다.

둘째, 1998년 헌법개정 이후 정상화된 국가기구는 금년도도 정상적으로 운영된 데 반해, 당의 파행적 운영은 지속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제4차 회의가 개최되어 예산심의를 하였고, 매년 정초에 개최되는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가 금년도도 소집되어 경제정책 운영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나 당 대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북한이 당 중앙위 전원회의나 정치국회의, 비서국 회의 등 주요 정책협의체를 정상화하지 않고 있는 것은 선군정치와 함께, “나는 사업을 회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노동신문』 2. 3)는 김정일의 발언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김정일은 신사고와 관련, 낡은 사업방법이란 회의를 하는 방법이므로 새로운 사업방법의 도입을 의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북한체제는 시스템에 의

존하는 통치가 아닌 김정일의 인적 통치가 계속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셋째, 선군정치의 지속으로 군의 위상강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과 군의 관계에 있어서 당이 앞자리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북한은 ‘당의 영도를 떠나서 군대만으로는 어떠한 일에서도 성공할 수 없고 강자도 승자도 될 수 없다’고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다. 군의 위상강화에 따라 군수산업, 군사·안보 등 군 관련 사항에 대해서 군의 정책적 영향력이 증가한 것은 분명하며 최고인민회의 주석단에서 국방위원회가 과거 당정치국과 같은 위상을 보여주는 등 군 부우위 정치체제가 지속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부의 정책 결정과정 참여는 군 관련 문제에 관해서 김정일의 질문에 대답하는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군정치는 경제에 대한 총대의 우위를 의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관영 매체는 과거 ‘경제사정이 아무리 부담이 크더라도 선군후로(先軍後勞)하라’(중앙방송, 1997. 10. 7)는 발언의 연속성상에서 2001년에도 “사탕이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총알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선군혁명에 관한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의 정치 철학이고 의지라고 강조하였다(평양방송, 9. 21).

2002년도에도 선군정치 구호가 지속되면서 정치적 안정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김정일의 위상제고와 적극적 대내외 활동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2002년은 김정일의 60회생일(2. 16), 김일성 90회생일(4. 15), 조선인민군 창건 70돌(4. 25) 등 상반기에 ‘경축행사’가 겹쳐 있다. 북한은 이러한 3대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성대히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백두산 혁명전적지 「노천혁명박물관」 건설을 대대적으로 준비해왔으며, 김부자의 위대성과 혁명전통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했다. 김정일 생일을 기념하여 군인사의 서열 승진이나 보상에 있어

서 파격적인 대우가 예상된다.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며, 통일지도자로서 김정일의 위상제고를 위해 대대적인 대남 선전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7차 당대회의 개최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선군정치」의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식 정치체제인 「선군정치」는 나라의 모든 정치, 군사, 경제적 역량을 총 지휘할 수 있게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권능을 강화한 것으로, 북한은 당 총비서가 통치하는 체제가 아닌, 국방위원장이 통치하는 체제이며 국방위원회 중심의 정치가 지속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비전제시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과 “사업을 회의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 김정일의 스타일로 봐서도, 당대회를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2002년에도 제도적 통치가 아닌 인적 통치가 지속될 것이다.

셋째, 북한은 2002년에도 과학기술에 의거한 정보통신 산업에서 활로를 찾고 경제회생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구현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김정일은 “자원이나 팔아먹고 관광업이나 해서 살아가려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을 그르치는 임시변통에 지나지 않는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거기에서 먹는 문제도 풀고 경제강국도 건설해야 한다”(노동신문·근로자 공동사설 2000. 7. 4)고 말한 바 있었다. 이는 김정일의 현대·정보화 능력을 겸비한 ‘21세기형 지도자상’ 구축과 연관되기도 한다. 새로운 경제정책의 추진 시 김정일의 중국방문 등을 수행한 연형묵의 총리기용 가능성이 있다. 연형묵은 군수공업분야 전문가이며, 1992년 12월부터 2년 6개월 정도 정무원 총리로 일하였고, 자강도를 전국의 모범지역으로 만든 바 있다.

넷째, 북한이 대외적으로 관계개선 노력을 기울일수록 대내적으로는 주민들의 동요를 예방하기 위한 사상사업이 강화될 수도 있다. 북한은 신사고를 언급하면서도 ‘우리의 리념, 우리식의 정치체제, 우리식의 혁

명방식은 견결히 옹호 고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2001년 북한은 신사고를 내걸었었지만, 이를 소련이나 중국에서처럼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급하다. 북한은 2002년에도 사회주의체제 붕괴와 경제난으로 인한 내부동요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주의 붉은 기 진군'과 '우리식 사회주의' 등을 내세우며 사상사업을 강화하고, 「선군정치」를 통해 군대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해 온 한편, 경제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며 체제수호차원에서 실리적이고 개방적인 대외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나. 경제동향

2001년도 북한 경제는 곡물생산의 증가, 광공업의 호조, 대외무역 증가 및 대외지원의 증가 등으로 경제 전반에서 작년보다 높은 성장률을 실현한 것으로 보이며, 1999년과 2000년에 이어 플러스 성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1년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국가 경제력」의 확대·발전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생산기반 및 생산 정상화와 경제전반의 현대적 기술 갱신 사업에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사회주의 경제 관리와 관련하여 북한은 '우리식으로 독특하게 개척해 나갈 것'과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개선과 완성'을 천명함으로써, 북한식 경제체제의 고수를 강조했다. 북한은 대안의 사업체계 철저히 구현,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 사회주의분배 원칙의 정확한 실현을 강조하는 한편,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익한 경제 활동 추진 등 실리주의 정책을 밝혔다.

경제 정책 상으로 볼 때, 전통적 당면과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지만, 2001년은 다소간 진전된 모습이 보인다. 북한은 2001년에도 전력과 석



탄 등 에너지 부문, 금속기계공업, 철도운수 등 경제 선행부문에 대한 강조, 농업생산증대를 위한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 두벌농사확대, 양어사업과 축산업의 장려 등 1998년부터 추진해온 정책을 지속했다. 그러나, 2000년도 경제중점 사업과 비교할 때, 2001년도 중점사업으로서 ‘생산시설의 기술갱신과 과학기술 풍토 확립’ 추가로 제시했으며,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경공업 부문의 생산증대, ‘문화 후생 및 보건 시설과 주택 증설’ 등을 위해 보다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다소간 진전된 모습은 1999년과 2000년의 연속 플러스 성장, 1998년부터 추진된 경제관리체계 및 생산 기반 안정화 등의 우호적 환경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의 10기 4차 회의(4. 5)는 2000년도 집행을 결산하고 2001년도 예산안과 가공무역법, 갑문법 및 저작권법 등을 채택했다. 2001년도 국가예산 수입은 215억 7,080만원(97.6억 달러), 지출은 215억 7,080만원(97.6억 달러)으로 책정했다. 2000년에 비해 수입은 103.2%, 지출은 102.9%로 늘어났다. 예산운영 면에서는 전력, 석탄 등 선행부문과 과학기술 및 인민생활 향상 등에 관한 지출이 2000년의 102.7%로 늘려 편성되었다. 국방예산은 총지출의 14.5%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 주었으며, 인민적시책비는 2000년에 비해 102.5%로 늘려 편성되었다.

북한은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 수산업과 축산 부문의 상황 개선에 주력했다. 북한은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 개천~태성호 물길 공사, 평양시 닭공장 현대화 사업을 2001년도 주요 건설 사업 대상으로 지정하여 추진했다. 또한 농업부분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 일부 협동농장의 연간분배결산 사업에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산업 부문에서는 메기 양어를 중심으로 양어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대규모 양어 시설과 메기공장, 메기 사료 공장 등을 건설하는 한편, 바다양식

장 건설도 추진했다. 축산분야에서 북한은 2000년도에 닭공장과 돼지·오리 농장을 잇달아 건설한데 2001년에는 대규모 염소 목장을 건설하는 등 대대적으로 염소사육에 나섰다.

북한의 곡물 생산은 6년만에 가장 좋은 실적을 내었다. 세계식량기구(WFP)는 9.25~10.5 북한 현지 조사를 통해 북한의 2001년도 곡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8%나 증가한 354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곡물생산증가는 주성장기의 양호한 기후조건, 농업부문 예산증가, 농업기계의 더 많은 이용, 지원 받은 비료의 공급증가 등에 기인했다. 그러나 북한의 예상수요량이 501만 톤임을 고려하면 2001/2002 곡물년도에도 북한은 여전히 147만 톤의 곡물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상업적인 수입량 10만 톤을 제외한 137만 톤을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광공업 분야에서 공장·기업소의 경제도대 정비를 위해 원자재·에너지 공급 및 설비 보수, 기술현대화 및 정보화 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특히 북한은 2002년 상반기의 주요 행사인 김정일 60회생일(2. 16), 김일성 90회생일(4. 15), 조선인민군 창건 70돌(4. 25) 등 중요한 정치 행사를 앞두고 경제 사업이 차질없이 완수되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북한은 11. 22 ‘라남의 봉화’ 기치를 내건 후, 전국적으로 대대적 노력동원 운동을 강화했다. 그 결과 예년보다 제조업 부문의 계획완수 공장·기업소의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생산활동이 대체로 호조를 보였다. 특히 2001년도 중점 사업이 ‘기술개건’사업 추진의 영향으로 낙원기계, 용성기계, 구성공작기계 공장 등 대형 기계공장들의 생산활동이 활발하였다. 또한 2001년도 김정일 60회생일 및 김일성 90회생일 등 대규모 정치 행사를 앞두고 추진한 인민소비품 증산 시책의 영향으로, 내수용 생필품 공장의 생산활동이 증가하였다. 다만 남북위탁가공 무역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용 생산부문은 다소 위축되었다. 경공업

공장들에서도 현대적 설비와 기술 장비 사업 및 정보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북한은 수력의존도가 높은 데, 수력 발전 전력 생산이 비교적 호조를 보였다. 이를 보면, 북한의 전력 사정이 다소 양호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001년 북한은 기존 발전소의 만 가동, 신규 발전소 건설, 발전설비 및 송배전 설비의 개선, 전력계통의 컴퓨터화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북한은 대규모 수력 발전소 건설에 역점을 두면서, 이미 건설 중인 남강 발전소, 태천3호 발전소 등을 조기 완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다수의 중소형 발전소를 건설했다. 아울러 북한은 전력 부문 설비현대화를 위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을 강구하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북·러 정상 간 모스크바 선언(8. 4)에서 러시아의 협력과 국제 사회의 지원을 강구하기로 확인했으며, 54차 북·중 수력발전회사 이사회를 개최(9. 24)하여 결정서를 채택했다.

북한은 과학기술 부문의 육성을 위해 노력했다. 대내적으로는 과학기술부문의 육성을 위해 축전, 전시회, 발표회,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를 연이어 개최했다. 대외적으로는 과학기술 대표단을 파견하거나 초청하여 대외협력을 통한 선진기술 도입에 주력했다. 북한은 부문별 과학기술발표회 등을 집중적으로 개최하고, 각 부문별로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인 “성공사례”들을 소개·평가함으로써 해당부문 종사자들에게 실용성 있는 새 기술을 널리 보급하고자 노력했다.

2001년 북한은 연일 “21세기를 정보산업시대”로 등식화하면서 IT산업 육성을 경제회복을 위한 「단번도약」의 중심 고리로 집중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 각 부문에서의 컴퓨터화 구축, 각 기관 간 인터넷 망 확충, 하드웨어 PC생산 개시 등 산업 각 부문에서의 정보기술 개발에 주력했다. 북한은 통신부문 현대화를 위해 대외적으로는 UNDP·ITU 등 국제기구의 지원 하에 선진기

술 도입을 추진하면서 각국별로 ‘체신협정’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 강화를 모색했다. 대내적으로는 통신의 광케이블화, 통신 중계소 증설, 컴퓨터 통신망 구축 등 평양~지방도시간 통신망 현대화에 주력했다. 특히 통신망 구축과 관련하여 각 기관 간 컴퓨터 통신망 확대를 적극 추진하였다.

수교 국가의 증대 등의 환경 속에서 북한은 대외경제협력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2001년도 3/4분기까지 북한의 경제대표단 초청·방문 횟수는 2000년 동기 대비 3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협 활동은 지역적으로 볼 때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방문이 초청을 크게 압도하는 등 적극적 자세가 나타났다. 경제대표단의 방문목적도 원자재·설비·기술 도입에 집중되고 있다. 북한의 경제 분야 해외 연수 사례도 크게 늘어났다. 연수 내용에서는 시장경제 및 무역 실무가 중심이 되고 있지만, 에너지·농축산업·의료 등 산업 부문의 선진기술 연수에도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도 북한의 대외 무역액은 1999년도 14.8억 달러, 2000년도의 19.7억 달러에 이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1년도 상반기 북한의 무역실적은 수입 12.2억 달러, 수출 2.9억 달러, 총 15.1억 달러로 2000년 대비 81.1% 증가했다. 이는 중국·일본으로부터 식량, 에너지, 경제건설용 기자재, 임가공용 원부자재 도입이 크게 증가했으며, 공장·기업소 생산정상화 등을 위한 수입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01년도에는 국제사회의 대북지원도 크게 증가했다. 9월말까지 대북지원 총액은 3억8천84만3천 달러로서, 2000년의 2억8천724만3천 달러에 비해, 32.6%가 증가한 것이다. 구성별로 보면, 개별국가 1천38만 달러, 국제NGO 1천979만3천 달러, UN기구 2억2천838만 달러, 한국정부 7천7만 달러, 한국민간 5천222만 달러로 이루어져있다. 이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북한의 이미지 개선, 2001년도의 수교 국가의

급증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2002년도 북한은 최근래 가장 안정된 정치 및 경제기반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생산기반을 정상화하면서, 경제를 현대화·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대중동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2001년도 경제 상황이 일정하게 호전된 것을 감안하면, 북한 당국은 상대적으로 여유있게 중장기 투자적 지출(정보 산업화, 현대적 기술 개건 등)을 늘일 수 있을 것이며, 식량 및 소비 상황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2002년도에는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의 가능성의 불투명은 북한의 대외 경제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전반적으로 무역확대·투자유치·외자도입 및 대외원조 확대 등을 위한 대외 경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지만, 큰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경색과 정체 국면이 지속될 경우, 내년도 북한에 대한 국제적 지원의사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 사업으로부터의 송금 감소 등이 지속되면 북한의 대외 무역, 특히 수입은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2002년도 대외 정치·군사 관계 및 대외경제관계에서 큰 개선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개혁·개방은 크게 진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경제정책, 경제관리에서 경제를 구조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서, 현 경제체제의 효율성을 증가시켜보고자 하는 슬로건과 조치를 반복할 것이다. 또한 2002년도 상반기에 김정일 60회생일, 김일성 90회생일, 인민군 창건 70돌 등 소비성 행사, 4월부터 6월까지 10만 명이 동원되는 아리랑 집단 체조의 지속이 북한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가능성도 있다.

## 다. 사회동향

북한이 2001년 신년 벽두에 소위 ‘신사고론’을 제시함에 따라 새로운 변화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고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는 개혁을 지향하는 새로운 정책의 제시라기보다는 사회동원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라는 측면이 강하였다.

북한은 외부의 지원에 힘입어 식량배급사정이 다소 호전되자 사회동원과 통제요원들에 대한 배급량을 증가하면서 사회동원에 박차를 가하였다. 『전국직맹선전일군회의』를 1998년 이후 3년만에 처음 개최(2. 27)하였는데 각 동맹원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사상교양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것’을 강조하였다. 이 「회의」는 신년에 강조하였던 신사고론 관련 내용을 선전선동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일군들에게 분발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여맹선전일군회의」(3. 25)도 이런 정치적 동기로 실시되었다.

북한은 전국 당 초급선전일군 6천여명이 참가한 『전국당초급선전일군대회』를 개최(4. 26)하였는데 이는 북한 역사상 처음 열린 대회이다. 당 초급선전일군들은 정보산업의 시대인 새세기에 현대과학을 모르고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똑똑히 인식시켜 현대과학기술을 배우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 풍조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주관으로 농업부문에서 3중 모범청년분조 칭호 수여식(2. 26)을 시행하였는데 이것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주의 노력경쟁의 확산을 유도하여 농업분야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군중동원 방식에 의한 생산성 향상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당정간부들과 청년동맹원 등 3천여 명이 참가한 『전국 청년전위들

의 사회주의 붉은기 총진군대회』를 개최(3. 29) 하였는데 청년들은 부르주아 자유화 바람과 비사회주의 현상을 반대배격하고 사회주의적 생활질서를 철저히 확립하며 집단주의적 기풍을 높이 발휘하도록 독려하였다.

「조선소년단」 입단식을 실시(6. 6)하여 만 7~13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사상교육에도 관심을 돌렸다. 이 입단식에서 “장군님의 가르침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자라날 것을 선서”하였다.

북한은 청년절을 맞아 전국청년과학기술전시회를 개최(8. 28)하고 청년들에게 김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고 강성대국 건설의 중심축으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였다.

북한은 최근 노래를 통한 강성대국 건설을 강조하고 있는데 연초에 노래모음집 「새노래」를 발간하여 보급(2. 25)하였다. 이 노래집에는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새날이 밝는다」, 「나는 장군님의 아들」 등 150여곡이 수록되었는데 이 노래집에 대하여 북한은 “음악은 정치에 복무해야 하며 정치가 없는 음악은 향기 없는 꽃과 같고 음악이 없는 정치는 심장 없는 정치와 같다”(중앙방송, 2. 13)거나, “노래는 사람들을 낙관주의자로 만들고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웃음으로 극복해 나가게 한다”(중앙방송, 2. 16)고 강조하였다.

북한은 사상적 해이를 극복하고 집단적 생산정신을 재충전하려는 데 목적으로 보이는 감사 및 상훈 수여를 대대적으로 시행하였다. 각급 생산단위 및 개인, 행정기관들을 대상으로 노력영웅칭호, 국가표창, 3대 붉은기, 김정일 감사 등 각종 상훈을 수여하고 있다.

북한은 11. 22 이후, ‘라남의 봉화’를 새 경제 슬로건으로 채택하여 공업부문의 생산성향상을 독려하고 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현대적 기계설비들을 자체로 만들어내는 기적을 창조한 라남의 일꾼들의 모

범은 새세기 진군에서 우리 인민이 발휘해야 할 투쟁기풍과 일본새의 본보기”(11. 22 노동신문)라고 주장하였다. 1998년의 성장의 봉화, 2000년의 낙원의 봉화에 이어 새로운 경제슬로건이다. 과거의 것은 자력갱생을 강조한 것인데 반하여 라남의 봉화는 자력갱생과 함께 기술혁신을 강조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북한은 강성대국을 강조하고 있다. 주체사상의 구호가 줄어든 반면에 강성대국의 구호가 크게 증가하였다. 북한은 노동신문 2만호 발간 기념 사설 『당의 붓대 중시사상을 구현하여 강성대국 건설을 적극 추동하다』 (12. 1)를 통해 “라남의 노동계급이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의 정신을 온 나라에 나래 치게 하며, 전체 인민을 강성대국 건설에도 힘 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 선전과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였다. 토지개혁법령 발표 55돌을 맞아 노동신문에 장문의 사설과 기고문을 게재(3. 5)하여 1998년부터 전개되고 있는 토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논평을 내면서 북한의 사회주의토지소유제의 우월성을 천명하였다.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만이 농민대중의 생산의욕을 높이고 농업생산이 농민들의 복리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적 토지소유 제도는 농업생산발전을 저해하는 사회악으로 세계식량위기 및 사회적 문제들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노동신문의 “자본주의 생활양식은 무서운 마약” 제하의 논설 (11. 28)을 통해 자본주의 생활양식을 철저히 경계하고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지켜나갈 것을 주장하였다. “자본주의 생활양식이 절대로 내부에 스며들지 못하게 모기장을 쳐야 하며 자그마한 싹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송두리째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청년전위 사설 (5. 25), 노동신문 논설 (9. 26), 조선기자동맹 8차대회 보고 (11. 19) 등에서 비슷한 내용을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본주의 착취론’을 제시했다. 노동신문 논설(10. 9)은 21세기 정보산업사회에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적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보산업의 시대에는 물질적 부의 창조는 지능노동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적대층으로 인식해왔던 지식층을 노동계급의 범주에 포함시켜 계급투쟁을 유발시키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2001년 들어 북한은 김정일을 과학의 선구자로 부각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연초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투쟁 기풍, 그리고 과학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북한의 신문과 언론은 그 모든 새로운 가치 지향을 김정일과 일체화하고 있으며 김정일이 그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다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김정일을 정보기술산업의 지도자라는 새로운 이미지로 우상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최근 경제정책의 핵심적 내용은 정보기술산업을 북한의 주력산업으로 특화하여 북한의 경제를 회생하고 선진국을 따라잡아 경제적으로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인데 김정일은 이러한 마스터플랜의 설계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동원 및 사회통합 정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북한주민들의 의식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자연재해, 외부의 경제제재에 경제난의 원인이 있다고 배운 대로 인식하던 주민들이 이제는 문제의 근원이 최고지도자에 있다는 인식을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이 증가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선호의식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부분적으로 북한 사람들은 대외·대남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도 관찰된다. 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 이후, 북한에서는 남측 물품이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다.

2002년 북한사회의 변화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당국의 사회통제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에 기인하여 의도하지 않은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일단 북한주민들이 기존의 교육받은 것,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것의 수준을 넘어선 새로운 경험과 정보에 의한 변화인 만큼 돌이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라. 군사동향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1년 새해 첫날 금수산 기념궁전을 참배하고 인민군 제932부대를 시찰했다(중앙방송 1. 2). 그는 설날과 일요일은 물론이고 북한에서 최대의 민족적 명절이라고 하는 김일성의 생일이나 자신의 생일, 국방위원장 추대일(4. 9), 창군일(4. 25), 최고사령관 추대일(12. 24) 등 주요 군 관련 기념일에 군부대를 방문하거나 군 공연을 관람하여 군에 대한 자신의 관심과 배려를 나타냄으로써 군의 사기진작과 충성심을 유도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군부는 예년처럼 신년 ‘공동사설’의 관철을 위한 「인민무력부 군인 쫓기모임」(1. 4)을 개최하여 “21세기의 사회주의 붉은기 진군에서 앞장 설 것”과 “반제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새해 전 투력 강화와 싸움준비 완성에서 전환을 일으킬 것”을 다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청년동맹」 창립 55주년(1. 17)을 맞아 청년군인들의 충성 결의대회(금수산 기념궁전 광장)가 열렸는데, 조명록·김일철 등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맹세문 채택이 있었다.

창군 기념 중앙보고대회(4. 24, 「4. 25 문화회관」)에서도 김영춘 총참모장은 김정일의 업적을 찬양하고 군의 전시태세 완비를 촉구하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의 대북 강경입장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 48주년(7. 27)을 맞아 인민무력부

는 장병들의 충성 결의모임(7. 26)과 노동신문 기념사설 “위대한 전승의 역사를 영원히 빛내이자”(7. 27) 등을 통해 선군정치를 강조하고 김일성 부자의 업적을 찬양했다. 특히 동 신문은 군이 “혁명적인 평균체계와 군풍을 세우고... 원수들의 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적들이 무분별하게 덤벼든다면 단매에 격멸 소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의 영향으로 장병 결의모임이나 노동신문 기념사설 등이 없었으나 금년에는 기념행사를 예년수준으로 진행했다.

김정일은 90년대이래 군 승진인사를 통해 혁명 1세대인 군 원로를 점차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고 2, 3세대를 중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젊은 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선군정치의 제도화 기반 구축과 자신에 대한 젊은 장성들의 충성심을 유도하려 하고 있다. 작년에는 총참모부 작전국장 리명주의 대장 승진을 포함 44명이 진급했는데, 올해에도 최고사령관 명령 제00140호인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 데 대하여”를 발표(4. 13), 장령급 19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실시했다. 이러한 인사를 통해 군부에서는 김영춘 총참모장을 비롯하여 총참모부와 인민무력부의 핵심간부 대다수가 만경대혁명학원 1~2기생으로 구성되었으며 만경대혁명학원 2~5기 출신들이 총참모부의 국장과 군단장을 맡게 되었다.

한편 북한의 군은 지금까지 사회기간시설 건설의 핵심노동력으로 건설현장에 투입되어 왔고 부진한 농업생산력을 회복할 목적으로 농장에도 파견되어 왔다. 곧 군이 국방 수호자의 역할과 동시에 난국 타개의 개척자 역할을 겸하여 온 것이다. 7. 24 중앙방송은 “인민군대가 당의 경제정책을 제일 먼저 받아 물고 그 정당성을 실천하고 있다”면서 “혁명적 군인정신에 기초한 군대와 인민의 사상 일치, 투쟁의 기풍에 의해 경제강국 건설의 진격로가 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분야에서 군대 동원이 필요한 이유는 북한이 과도한 군대 유지

등으로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현재 110만명 정도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노동력이 부족한 실정에서 17세에서 27세까지의 젊은이들인 군 인력의 활용은 경제건설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더욱이 건설장비가 크게 모자란데다 에너지 공급도 원활하지 못해 공사의 대부분을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도 경제건설에 군 인력의 투입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에도 인민경비대 장령·군인들, 부대 종업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천 언제 착공식(3. 13)을 거행했다. 회천 언제는 ‘제3차 7개년 계획’에서 건설하기로 하였으나 그동안 공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던 회천 발전소에 발전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댐이다. 착공식에 인민경비대 관계자들이 주로 참석하였다는 점에서 회천 일대의 군인들이 이 공사에 집중 투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사 분야의 남북관계에서 특기할 일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위한 제4차 남북군사실무회담(1. 31, 판문점 「평화의 집」)과 제5차 회담(2. 8, 판문점 「통일각」)이 개최된 것이다. 그 결과 비무장지대 내 남북관리구역의 폭, 남북관리구역 내 시설물 설치문제, 지뢰제거 범위·작업 시기, 우발적 충돌사태 방지대책 등에 합의했다. 작성된 합의서는 쌍방 국방장관의 서명절차를 거쳐 교환함으로써 효력을 발효하나 서명하기로 한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열리지 못해 절차가 완료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합의 자체는 남북간 화해협력의 상징인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본격 착수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남북간의 군사 분야 협력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다. 특히 공사기간 중 비무장지대 지역에서 쌍방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행동규칙에 합의한 것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과정의 중요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매년 북한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올해에도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가운데 북한은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RSOI)을 비난하는 외무성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다. 동 담화에서 북한은 “미국이 조·미사이의 합의를 완전히 뒤집고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적대시정책을 더욱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남조선 당국이 이에 기어이 가담한다면 그것은 북·남 공동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행위로밖에 달리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담화는 동 훈련에 대한 연례적인 입장 표명이었으나 6. 6 미국이 대북 대화의 3개 의제를 발표하자 대미비난은 더욱 거세어졌다. 즉 미국이 재래식 군사력의 감축을 요구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것이고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대북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대북 압살정책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평양방송, 8. 5). 또한 남북정상회담 이후 거론하지 않던 주한미군문제에 대해 “조·미 사이의 평화협정 체결과 남조선 강점 미군철수는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며, 조·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8. 8 노동신문 논평)했다.

한편 연례적인 군사외교도 진행되었다.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고위군사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4. 26~28)했고 쿠바 군사대표단이 북한을 방문(7. 3)했으며 11월에는 김송운 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민군 친선참관단이 중국을 방문(11. 10~13)했다.

러시아방문에서 김 인민무력부장은 4. 27 클레바노프 부총리와 북·러간 ‘방위산업 및 군사장비 분야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세르게이 이바노프 국방장관과는 ‘2001년 군사협력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 방문은 러시아 측과 군사기술 및 방산 협력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미국의 대북 강경입장 지속에 대해 양국간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북·러 공조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과 러시아는 구소련 당시 고위 군사대표단

이 연평균 5~6회 교환 방문하였으나 구소련 해체이후 군사교류가 소원해 졌다가 작년 2월 러시아의 이바노프 외무장관이 북·러간 ‘우호선린협력조약’ 체결 차 방북했을때 국방부 인사가 수행함으로써 교류가 재개되었다.

쿠바 군사대표단을 맞아 북한은 양국간 군사부분에서의 친선관계 발전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군 총참모부 주최 연회에서 북한과 쿠바는 연설을 통해 친선과 연대성의 강화·발전을 강조했다. 쿠바 군사대표단의 방북은 양국 군 고위인사의 연례적인 상호방문인데, 1999년에는 박재경 대장이 쿠바를 방문했고 지난해는 쿠바의 멘데스 군 대외관계부장이 방북한 바 있다.

김송운 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방중하여 츠하오텐(遲浩田)과 환담(11. 12)했다. 이를 보도한 평양방송(11. 13)에 따르면 츠하오텐 국방부장이 “국제정세가 아무리 변한다 해도 두 나라 사이의 친선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며 두 나라 사이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 “지역과 세계평화와 안정에 이로운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 군사대표단의 방중은 지난 9월 뮈트玉謙 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군사대표단의 방북에 대한 상호 친선 방문 차원의 답방으로 보인다.

북한은 『민주조선』을 통해 선군정치를 강조하면서 ‘용군사상(擁軍思想)’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제시(11. 13)했다. 『민주조선』에 의하면 ‘용군사상’이란 군대를 옹호하는 사상, 즉 군대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관점을 갖고 군대를 적극 지지하고 따르는 자세와 입장으로서는 기존의 선군정치, 선군사상과 같은 의미이다.

중앙방송도 “고난의 행군시기에 경제건설에 급급하여 총알이 아닌 사탕생산을 중시했다라면 우리는 오늘같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은 고사하고 벌써 열 백번도 더 망하고 말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선군정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12. 10)했다.

이는 북한이 2002년에도 체제유지와 경제건설 등에서 군대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군대를 적극 지지·지원하는 분위기 조성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내년도가 김일성 90회생일, 김정일 환갑, 창군 70돌이 되는 해이므로 당의 정책 관철을 다짐하는 선전선동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충성 맹세 등이 크게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 2. 주요 대외관계

### 가. 북·미관계

2001년 북·미관계는 2000년의 대화분위기에서 크게 후퇴하여 냉각되었다. 미국과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의 말기인 2000년 하반기 조명록 차수의 워싱턴방문과 올브라이트 장관의 평양방문 등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문제에 대하여 의견접근을 보이면서 북미관계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금년 2월 부시행정부의 출범이후 북미관계는 2000년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였다.

부시행정부의 대북인식 및 정책은 3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변화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대통령은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원칙적 동의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북정책과 차별화되는 발언을 하였다. 우선 부시 대통령은 적어도 지금 당장은 클린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어받을 의도가 없으며, 미국이 빠른 시일 안에 북한과의 미사일회담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그는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개인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고 북한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북한의 각종 무기 수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며, 이의 중지를 강조하였다. 북한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북한과의 합의내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합의에 대한 완전한 검증절차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6. 6 마침내 대북정책 재검토의 종식과 대북 대화의 재개를 선언하였으나, 대화의제로서 핵,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를 제시한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채 실질적으로 북미대화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한 것 등과 관련, 미국을 맹비난하기 시작하였다. 정상회담 직후 평양방송은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수수방관할 수 없는 위험한 군사적 결탁책동”이라고 비난하였다(평양방송, 3. 14).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발언을 남북한이 화합하여 통일하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미국의 ‘반통일정책’으로 규정하고, 남북, 해외 전 체동포가 이를 저지하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평양방송, 4. 3, 4. 19). 나아가 북한은 미국의 재래식무기감축관련 발언에 대하여 민감하게 비난하면서, 주한미군철수 주장으로 대응하였다. 북한은 ‘미군철수부터 논해야 한다’는 제목의 『노동신문』논평(4. 16)을 통해 한반도 군축의 선결조건은 주한미군 철수며,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연방제통일과정에서 남북군축문제는 남북간에 다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평양방송, 4. 17, 조선중앙TV, 3. 27).

북한은 미국을 맹비난하면서도 북·미간 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신문』논평(3. 19)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조미사이의 대결이 해소되고 관계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이로부터 우리는 클린턴 집권 시기 미국과 여러 갈래의 대화를 진행했으며 공동 코뮤니케도 발표했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미국의 제네바합의 파기 가능성을 비난하고, 이의 준수를 강조하였다.



미국의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북한은 3월 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연기한 이후 남북관계를 동결시키고, 북·중관계, 북·러관계의 개선을 통해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향후 북·미대화에서 자신의 협상력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의도는 9.11테러사태로 수포로 돌아갔다. 테러지원국과 미사일 개발 등에 대한 미국의 입장 강경화로 대북 입장도 강경화되고, 향후 대외관계에서 테러사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또한 대테러전쟁을 계기로 중국, 러시아의 대미협력이 강화되고, 5차 장관급회담에서 한국은 북한과 반테러선언을 요구하는 등 한·미 공조체제 역시 강화되었다. 북한은 우리측의 최근 외교활동이 민족자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등 남한의 대북인식에 대하여도 불만을 표출하며,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자주적 입장을 지킬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어느 일방이 외세에 의존하고 외세의 간섭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대결하는 자세이지 통일하려는 자세라고 볼 수 없다”(평양방송, 10.28) 면서, APEC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의 개혁개방유도’ 발언을 비난하는 등, 개인적 신뢰저하를 암시하였다.

2002년도 북·미 관계는 교착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제시한 대북 대화의 3대의제에 관련하여 북한과 미국간에 타협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이러한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2002년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대테러전쟁의 여파로 미국의 북한과의 관계 개선 관심은 감소했으며, 9. 11 테러사건 이후, 북미간에 긴장이 고조되어 왔다. 2001년 12월 미국은 중국, 러시아에 이어 이란, 이라크와 함께, 북한을 세계 3위 안보 위협 국가로 거론하고, 북한을 생물무기개발국으로 지명하는 등, 북한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였다.

## 나. 북·중관계

2001년 중국과 북한은 김정일의 방중과 장쩌민의 방북과 중국 개혁노선에 대한 북한의 인정,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등을 통해 외형적으로 한·중 수교 이전의 관계를 회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중 관계의 중요성 증대와 WTO 가입에 따른 서방국과의 협력 필요성 증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북한과의 ‘혈맹’관계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001년 북·중관계의 중요 진전은 1월에 있었던 김정일의 방중(1. 15~20)과 9월 장쩌민의 평양방문(9. 3~9. 5)을 통해 이루어졌다. 김정일은 방중시 상하이의 증권시장과 푸동 지역을 방문, 중국의 개혁성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장쩌민의 방북시에는 중국의 ‘3개 대표론’을 인정함으로써 중국의 개혁노선을 둘러싸고 북한과 중국사이에 존재하던 ‘이견’을 해소하였다.<sup>2)</sup> 장쩌민은 북한 방문 시 식량 20만 톤과 디젤유 3만 톤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호의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장쩌민의 방북을 통해 북·중 우호친선 관계 확인 등 외형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러시아의 대북접근에 대한 견제 등 실질적 방북 목적 달성에는 미흡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장쩌민이 2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김정일의 남한 답방을 우회적으로 권유하고 대화를 통한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중·미 협상 카드화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3개 대표론’이란 중국공산당은 선진생산력, 선진문화, 광대한 인민의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공산당 내에 자본가를 포함할 수 있다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이후 ① 한중관계의 진전에 대한 북한측의 불만, ② 중국의 개혁노선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인식, ③ 장쩌민과 김정일의 상호방문을 둘러싼 신경전, ④ 북·미관계의 불투명성 등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야기하였는바, 중국은 장쩌민의 방북을 통해 이와 같은 북·중간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다. 2000. 8 김정일은 방러를 통해 미국 MD계획, 유엔문제, TSR 연계문제, 세계정세 등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고, 대가로 주한미군과 북한의 미사일개발 및 통일방안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와 북·러 경제협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러시아와의 급격한 관계진전을 이룩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장쩌민의 방북을 통해 중국의 새로운 이념 노선에 대한 북한의 이해와 남북한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협상입지 제고 등을 추구하였으나, 결과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sup>3)</sup>

2001년도 북·중관계는 외견상 김정일의 중국 방문과 장쩌민의 방북으로 인해 1990년대의 한·중수교와 중국의 개혁노선을 둘러싼 갈등구조를 해소한 것으로 보이나, 북한의 대러시아 접근 정책 및 EU국들과의 관계개선, 북한경제의 일부 개선 징후 등으로 인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장쩌민 방북시(2001. 9)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유보 조치 지속에 대한 언급을 유도하였으며, 김정일의 남한 답방 및 북·미관계 개선에 대해 권유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의 입장에 성의를 보였다. 이는 한·중관계 및 미·중관계에 진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러시아의 대북한 영향력 확대에 대해 중국이 견제할 의향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가능

3) 북·중 정상회담 이후 공동선언 또는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았으며, 장쩌민 귀국이후의 기자회견과 평양의 방송 등에서도 구체적인 합의 사항이나 성과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북한과 중국간 상당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음.

성이 있음을 확인하게된 계기가 되었다.

2001년에는 그 동안 남북한에 대해 균형외교의 틀을 유지해 온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한국과는 경제를 포함한 전반적 관계의 확대, 북한과는 외교·안보전략적 차원에서의 관계 유지’로 보다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대화 및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중국의 지지는 대미전략적 고려와 한·중관계의 확대, 그리고 중국의 국익보호 차원에서의 한반도 평화 유지의 필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국익의 관점에 의한 중국의 독자적 정책 판단의 결과이며, 한국이 중국의 대북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002년도에도 중국은 남북대화의 지속과 북미관계의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할 것이다. 핵사찰 및 미사일 무제 등 현안으로 인해 북·미관계가 악화될 경우, 대화를 통한 해결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북·미대화를 위한 중재자의 역할을 자임하되, 북한의 입장에 대한 동조는 유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의 ABM 탈퇴 등에 대응하여 러시아와의 전략적 공조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북한을 활용한 러시아의 대한반도영향력 확대 견제,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 효과 중화, 중·북관계의 유지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대북한 경제지원을 지속할 것이다. 그러나 WTO 가입에 따라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상징적으로 호의를 표시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며, 대량지원에는 신중한 자세를 보일 것이다.

2002년에는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의 군사전략적 활동이 확대되고, 미국의 ABM 탈퇴 강행에 따른 중·러와 미국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며, 미·일간의 군사동맹 정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중국은 대만해협에서의 무력시위와 북한과의 군사적 협력 강화, 그리고 전략무기 개발의 가속화 등을 통해 미국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 경제의 세계편입은 미국과의 군사·외교적 갈등의 증폭을 제약하는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북한이 세계경제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점으로 인해 중·러의 미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 다. 북·일관계

2001년 북·일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진 후, 점차 경색되어갔다. 북·일 양국은 11차 수교회담(2000. 10. 30~31)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그 후에도 일본인 납치문제, 북한 핵·미사일문제 등에 대한 대립적 입장 해소에 진전이 없었다.

2001년 5월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이 가족과 함께 일본에 불법 입국하려다 체포되었다. 조용히 처리할 수 있었던 일이 출국 전날에 맞춰 공개됐다는 점 등을 들어 일본 내에서는 ‘음모론’도 제기되었다. 이는 일본내 대북 강경파들의 ‘북한은 부도덕한 나라’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일종의 공작이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일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조총련은 “이런 문제가 테마로 오른다는 자체에 분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한 남북한과 중국의 반대 여론이 높았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2001. 7. 9~10. ‘근대 일본의 내외 정책’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열었는데, 여기에 남북한과 중국·일본의 진보적 학자들이 대거 참여 일본 교과서 문제에 대해 비판했다. 북한 역사학회 회장으로 일제의 식민사관을 공박해온 허종호(許宗浩) 원사는 “일본 교과서 왜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선(한국)을 오랜 옛날부터(중국이나 몽고의)종속국으로 표현해 조선의 자주성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북한과 중국·일본의 진보적 학자들은 현재 일본이 주변 아시아 국가의 반발을 무시하며 패전 후 오랫동안 준비해온 시나리오에

따라 군국주의 부활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제적으로 연대하여 이 같은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처할 것을 다짐했다.

일본경찰은 2001. 11. 28 조총련에 금융기관인 조긴도쿄(朝銀東京)신용조합의 불법용자 혐의를 잡고 조총련 및 금융기관의 간부들을 체포하였다. 일본경찰은 조합자금 8억 3000만엔(약8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총련계 중앙상임위원이며 전 재정국장인 강영관을 체포하였다. 또 수사기피 혐의로 전 조합이사장인 정경생 등을 횡령혐의로 기소하였다. 조합으로부터 개인명의로 26억 엔을 용자받은 강상임 위원은 아사히(朝日)신문(11. 28)에 “실제 돈을 빌린 것은 조총련이며 돈도 조총련을 위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12. 17 일본인 납치 의혹 문제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겠다고 밝혀 북·일 관계가 급속히 악화될 조짐이다. ‘납치 문제’는 일본이 북한과의 수교협상에서 내걸고 있는 최대 현안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이 조사를 중단하겠다는 북한의 태도는 납치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냉각시킬 수밖에 없다.

북한의 대일 강경 태도는 조총련 산하 금융기관의 부정대출 사건과 관련한 일본 경찰의 조총련 강제수사에 대한 맞불 놓기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으로선 조총련 수사를 ‘테러지원국’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본의 대북 쌀 지원과 관련 일본 정부는 올해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을 유보키로 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최근 쌀 20만톤을 북한에 지원해주도록 일본 정부에 비공식 요청하였다. 이에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현재 일본과 북한간의 정치·외교적인 역학관계를 볼 때 대북 지원을 서두를 상황이 아니다”(10. 17)라고 밝혔다.

2002년의 북·일관계는 2001년 3/4분기에 일어난, 일본의 조총련계 신용조합 조사, 북한의 일본인 납치 의혹문제에 대한 조사중지조치,

12월 말 북한 소속으로 추측되는 선박의 배타적 경제수역 침투 사건 등의 여파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대북정책은 더욱 소극적이고 신중하게 전개될 것이다.

### 라. 북·러관계

2001년 북한과 러시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의 출범(1998. 9)과 엘친 대통령 사임(1999. 12. 31)이후 호전되기 시작한 양국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켰다.

미국의 부시행정부 출범(2001. 2)이후 미국의 일방적인 미사일방어 체제(MD) 구축과 대북 강경정책에 따른 미·러관계 마찰, 북·미관계 악화 등으로 북·러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하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제2차 정상회담을 모스크바에서 개최(8. 4, 8. 8)하고, 「조·러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합의된 8개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북한은 러시아가 제기한 TSR-TKR 연결문제와 관련, 철도수송로창설문제로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동시에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재정지원을 통한 북한기업소 개건(특히 전력부문)문제를 양해하고, 지난 시기의 채무(약 50억 달러 이상)에 대한 변제계획도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러시아의 환심을 유도함으로써 대러 경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구소련식 군사무기 및 편제를 현대화하려는 의도를 엿보게 하였다.

둘째, 북한은 러시아가 주장하고 있는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조약」의 유지 불가피성을 지지하는 동시에, 공동선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정상회담 중 김정일 위원장이 2003년까지 미사일 시험발사의 유예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지는 바, 2항에서 미사일개발계획을 평화적 성격을 띄고 있는 것으로, 자주권 문제로 강조하는 한편, 8항에서 주

한미군 철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지난 6월 미국이 대북 의제로서 재래식무기문제를 언급한 것과 미사일문제를 강하게 지적한 것에 대한 강한 대응준비를 갖추었다. 또한 러시아는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 통일이후에는 철수해야 하나 현재는 동북아 안정의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표명”할 뿐, 북한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다.

셋째, 러시아는 7항에서 “외부의 간섭”이 없는 남북대화의 지속을 지지하고, 한반도문제에 대한 “건설적이며 책임적인 역할을 수행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동시에 8항에서 북·미 및 북·일 대화를 지지하였다. 향후 러시아는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서 타국의 영향력 증대를 배제하고 자국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높으며, 철도 연결 문제에 이해를 갖고 있는 푸틴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권유했을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러시아는 북·미/북·일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주한미군철수 이해에 따른 미국, 일본 등의 반발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반적인 협력 분위기 속에 양국은 정치·경제·군사 모든 부문에 있어 관계를 발전시켰다. 먼저 정치부문을 볼 때, 북한은 『조·러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체결(2000. 2. 9)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2. 8)를 갖고 양국 친선관계 발전을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 국경절(6. 12)에 즈음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명의의 축전(6. 10)을 각각 보내고, ‘조·러 전통적 친선 관계가 더욱 확대 발전될 것을 확신’함을 천명하였다. 이에 신임 주북 러시아대사 안드레이 까를로프는 김정일 방러 기념연회를 개최(10. 29, 양국 최고지도자간 교환방문을 계기로 조성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을 강조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또한 외교관례상 이례적으로 동 대사를 접견·오찬(12. 5)을 함께 함으로써 양국관계를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였다.

경제부문에 있어 북한과 러시아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문제, 북한 전기난 해소 및 기업소 개진문제를 중심으로 협력을 심화시켰다. 양국은 푸틴 대통령 방북시(2000. 7)시 경제분야 개별회담을 통해 양국간 철도운수부문 협력사업을 강화키로 합의한 이래 「북·러 철도연결협력의정서」를 체결(2000. 10)하였고, 2001년에 들어와 러 철도부장관의 방북(3. 16~20)과 북 철도상의 방러(7. 24)를 통해 논의를 심화시켰으며, 김정일 위원장의 방러기간 중 「북·러 철도협력협정」을 체결(8. 14)함으로써 TSR-TKR 연결사업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교통성 기술실무대표단의 방북(3월과 9월)을 통해 철도부설 기술 및 재정상의 문제점 검토 등 구체적 실무작업을 진행하였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북한은 지난 3년간 외화획득의 주요 자금원이었던 금강산 관광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여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외화소득원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군사부문에 있어서도 양국간의 협력이 10년만에 다시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북한과 러시아는 1989년 이후 10년간 군사교류를 중단했었다. 그런데 2001년 들어와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러시아를 방문(4. 26~28)하여 방위산업 담당 부총리 일리야 클레바노프, 국방장관 세르게이 이바노프와 연속회담을 갖고, 「방위산업 및 군사장비 분야에 관한 협력협정」과 「2001년 군사협력협정」을 체결(4. 27)했다. 동 협정은 소련이 북한에 제공했던 무기들의 현대화와 북한 군 인사들에 대한 러시아측의 교육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양국은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제2차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군사공동위원회」를 개최(12. 1~8, 평양 추정)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는 모스크바 선언에 명시된 군사분야의 쌍무협력을 발전

시키기 위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요컨대 2001년 북한과 러시아는 제2차 정상회담과 정치·경제·군사분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국가실리를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우 ‘강성대국’ 건설과 대미 협상기반 확보를 위하여 정치적으로는 푸틴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정통성을 강화하는 한편 대미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치강국’ 위상을 제고하고, 경제적으로는 경험확대와 기업소(특히 전력분야) 개건 등을 통해 ‘경제강국’ 건설을 도모하고, 군사적으로는 미사일계획의 평화적 목적과 주한 미군철수 문제를 제기하여 미국의 대북 강경노선에 대한 대응카드를 제시하고, 러시아 군사무기 구매와 부품의 장기 확보를 통해 ‘군사강국’ 강화를 지속한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 경우 ‘초일류대국’으로의 재도약과 대미 협상력 강화를 위해 정치적으로는 대북관계 강화와 중단된 남북대화 중개자 역할을 통해 한반도 영향력 증대를 도모하고, 경제적으로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중단철도(TKR)의 연결을 통해 남·북한·러시아 3각 경험의 실익확보와 시베리아 개발을 적극 추구하고, 군사적으로는 러·북·중국 3각 연합전선의 형성을 통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2년 북·러관계를 전망해 볼 때, 북한과 러시아는 러시아의 변화에 따라 이념적 연대감을 상실하였지만 상호협력의 필요성으로 인해 침해한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회피해 가면서 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의 지속적 확보와 아시아·태평양으로의 진출을 위해, 북한은 체제유지와 현실적응을 위해 원만한 양국관계의 유지를 희망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과거 이데올로기적·군사적 영역 중심의 동맹적 국가관계에서 벗어나 정치·경제적 영역 중심의 정상적 국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 3. 대남동향

2001년도 북한의 대남동향은 2000년과는 판이하였다. 2000년도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가 급진전되었으나 2001년에 들어서는 2회의 장관급 회담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불신만 확인했을 뿐 별 진전이 없었다. 이는 부시행정부의 대북 불신과 '9·11 테러사건'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01년도 북한의 대남동향은 크게 당국간 부문과 비당국간 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볼 수 있다. 우선 당국간 부문은 제4차(1. 31) 및 제5차 남북 군사실무 회담(2. 8), 제1차 남북 전력협력실무 협의회(2. 8~10), 임진강 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2. 21~24), 제5차(9. 15~18) 및 제6차 남북 장관급 회담(11. 9~14)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위한 제4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어 비무장지대내 남북관리구역 설정, 공사기간중 적용 공동규칙 등이 논의되었으며,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위한 제5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되어 비무장지대내 남북관리구역의 폭, 남북관리구역내 시설물 설치문제, 지뢰제거 범위·작업 시기, 우발적 충돌사태 방지대책 등이 합의되었다.

아울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2000. 12. 28~30)에서 합의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이 문서교환 방식으로 최종 합의(1. 30)되었고, 남북전력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가 평양에서 개최(2. 8~10)되어, 남북간의 전력협력을 위한 실태조사 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이어서 임진강 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가 평양에서 개최(2. 21~24)되어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를 위한 공동조사단 구성, 조사대상 및 방법 등을 협의하였다.

그러나 남북 당국간 관계는 「한·미 정상회담」(3. 8) 이후부터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회의적 인물’로 묘사하였고, 이에 대해 평양방송은 ‘민족공조’를 강조(3. 9)하면서 불편한 입장을 표시하였다. 이후 북한은 남북장관급 회담 북측대표단장을 통해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서울개최 예정이었던 제5차 남북장관급 회담(3. 13~15)을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3. 13)하였고, 북한 탁구협회 서기장은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참가 철회를 통보(3. 28)하였다. 북한의 연기사유는 미국의 김정일 위원장 비판에 대한 남한의 소극적 태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2월부터 지체되기 시작한 「현대」의 ‘금강산관광비용’ 미지급사태도 장관급 회담 연기 사유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과 관련한 남한내 ‘반북여론’과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안 국회상정을 고려한 듯 당국간 대화 재개를 제의(9. 2)하였고, 남한측 대표단 수석대표는 제5차 장관급회담을 9.15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갖자고 제의(9. 6)하였다. 북측이 동일 남한의 제의를 수락함으로써 ‘9·11 테러사태’에도 불구하고 제5차 장관급 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그 결과 5개항의 공동보도문이 발표(9. 18)되었다.

5차 장관급 회담 합의에 따라 금강산에서 관광사업 관련 당국간 회담이 개최(10. 3~5)되었으나 북한의 금강산관광 미납금 2,400만달러 선지급 주장과 남한의 경제특구 지정 및 육로관광 개설 주장이 접점을 찾지 못함으로써 이 회담은 ‘10.19 2차 회담 개최’만을 합의하고 끝났다.

우여곡절 끝에 개최된 제6차 장관급 회담도 성과없이 끝났다. 북한은 제5차 장관급 회담 합의사항으로서 상봉자 명단까지 교환한 상태였던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 및 태권도시범단 서울과견을

남한의 '비상경제조치'를 이유로 연기(10. 12)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기타 당국회담'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문제는 북한이 제6차 장관급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금강산관광 제2차 당국간 회담 장소를 '금강산지역'으로 한정할 점이었다. 이후 제6차 장관급회담의 개최를 위해 남북간에는 14차례 정도의 전화통지문이 오갔다. 대표적인 것은 남한의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2차 당국간 회담 설악산 개최 및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2차회의 서울 개최 제의(10. 16), 북한의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회담 10. 25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회의 11. 5 제6차 상급회담 10. 18 금강산 개최 제의(10. 18), 남한의 제6차 장관급회담 10. 28 평양 개최 제의(10. 22) 등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북한대표들의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금강산 회담을 고집하였고, 남한은 전화통지문(11. 2)을 통해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 금강산 개최(11. 9~12)를 수락함으로써 11. 9부터 14일까지 회담이 개최되었으나 이 회담도 아무 성과없이 종결되었다. 그 이유는 북한이 '비상경제조치의 조기해제' 및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장소의 금강산 고수' 때문이었다. 제6차 장관급 회담 결렬 이후 오전 중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내 북한군 경계초소(GP)에서 기관총 2~3발이 발사되었고, 우리 군 초소에서도 15발을 응사하는 사건이 발생(11. 27)하였으나 더 이상의 충돌로 비화되지는 않았다.

남북관계의 소강상태 속에서 북한은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한의 '전환적 조치'를 주장(12. 17)하였고, 남한의 통일부는 '무조건 남북대화 호응'을 주장(12. 20), 남북 양측은 대화를 모색하였다.

한편 비당국간 부문은 매우 활발한 협력관계가 지속되었다. 북한은 '정부·정당·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1. 10)를 개최, '6. 15 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이

행'과 금년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정할 것 및 '6. 15~8. 15 민족통일 촉진운동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낙관적 전망을 낳게 하였다. 아울러 「북적」은 이산가족 문제와 비전향장기수 추가송환 문제 협의·해결을 위한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입장을 표명하고,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을 1. 29~31 금강산지구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1. 11)하였으며 남북장관급회담 북측단장은 남북 '태권도 시범단 교환' 관련 남북접촉 주선을 제의(1. 12)하여 연초부터 북한은 긍정적 신호를 많이 보냈다.

이에 따라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이 금강산호텔에서 개최(1. 29~31)되었고, 이산가족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제3차 이산방문단 교환 등 6개항의 합의사항이 공동보도문 형식으로 채택되었으며, 북한태권도위원장은 남북 태권도시범단 상호교환을 위한 단체간 실무접촉을 3월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2. 12)하였다. 이후 남북한 적십자사는 제3차 남북이산가족교환을 위한 방문단 명단을 교환(2. 17)하였고, 이산가족 동시상봉이 성사(2. 26~28)되었다. 아울러 남북적십자사는 분단이후 최초로 쌍방 각기 300통씩의 이산가족 서신을 교환(3. 15)하였다.

한편 제5차 장관급회담 연기에도 불구하고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 방북(3. 10~14) 및 현대그룹 전명예회장 정주영 사망(3. 21)관련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의 조전(弔電) 및 송호경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조의대표단 서울방문(3. 24) 등이 이루어졌고, 「북적」은 요소비료 20만톤 지원을 요청(4. 19)하기도 하였다.

이후 남북 노동단체가 주관한 '5.1절 통일대회'가 금강산에서 진행(5. 1)되었고, 북한은 '정당·단체 연합회의' 명의로 6. 15 남북공동선언 1돌 관련 '민족통일대토론회'를 제의(5. 28)하였다. 이에 따라 '민족통일대토론회'관련 실무접촉이 금강산에서 개최(6. 4~5)되었고, 주제·일정·참

가 규모 등이 합의되었다. 이와 함께 남측의 「전농」·「전여농」과 북측의 「농근맹」의 ‘남북통일농민대회’가 금강산에서 개최(7. 18~19)되었다.

남북한간 민간급 통일운동과 관련한 중요사건은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관련 행사였다. 남한의 「민화협」·「통일연대」·「7대종단」은 우여곡절 끝에 ‘2001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여(8. 15)하였다. 그러나 이 행사는 남한인사들의 3대현장기념탑 행사참여, 강정구 교수의 ‘만경대정신’ 방명록 기록사건으로 인해 남한내에 극심한 사상논쟁을 일으켰고, 임동원 장관이 국회에서 탄핵됨으로써 행사의 의미가 크게 퇴색되었다.

한편 북한은 6. 2와 3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북한상선 3척을 제주해협에 무단 침범시켰다. 이것은 금강산관광 사업에 대한 남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대한해협 및 NLL침범사건 이후 한국관광공사가 금강산관광 사업에 참여(6. 20)하였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 사업은 「현대」의 자금난, 국민의 무관심, ‘피주기론’ 등으로 인해 12월말로 중지되고 말았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2002년 4월 공연될 집단체조 ‘아리랑’을 “남조선 동포여러분은 아리랑을 볼 기회를 놓치면 일생을 두고 후회하게 될 것”(12. 5)이라고 선전, 2002년에는 남한주민을 상대로 대규모의 ‘아리랑 참관단’ 모집을 예고하였다.

2002년도 북한은 대북 지원량의 증가, 3대행사와 아리랑 집단체조를 계기로 한 대남 민간 초청사업, 지방선거 및 대통령 선거에서의 한국의 민심과 권력 동향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남 정책을 진행할 것이다. 북한은 3월까지 한국정부와 북한 당국은 대테러전쟁 마무리 절차, 남한 내의 여론 전환을 관망하면서, 대화 재개의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할 것이다. 또한 2. 15의 김정일 60회생일, 4. 15 김일성 90회생일, 4

월부터 6월까지의 ‘아리랑 집단체조’ 등의 행사 등을 통해, 5월 한국의 월드컵 행사 개최에 대응하며, 내부 경축 분위기 고양을 위해 한국에 민간 차원의 교류를 제안해 올 가능성이 많다. 만약 6월 이후 미국이 대테러전 확산의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압력을 증대하는 경우, 대미 관계가 악화되며, 남북관계에서도 일정한 경색과 긴장 상황을 의도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지방선거의 결과와 대통령 선거전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이에 대한 평가와 개입을 시도할 것 보인다.



### Ⅲ. 남북한 관계

#### 1. 남북대화

##### 가. 정상회담

지난해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간의 회담은 분단 55년만에 열린 것으로 회담 말미에 5개항에 달하는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이 약속되었다. 올해 들어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큰 화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었다.<sup>4)</sup> 두 정상간의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군사적 긴장 해소와 평화체제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도출함으로써 남북평화협력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순조롭게 진행되던 남북간의 당국자간 회담이 미국의 부시 행정부 등장과 함께 제동이 걸리면서<sup>5)</sup> 그 동안 당연한 수순으로 인식되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문제는 이상조류를 타게 되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측의 다방면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계속 미루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정치권과 여론 일각에서는 점

4) 통일부의 2001년 6대 대북정책 중점 추진과제 중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가 첫 번째 과제로 제시되었다.

5) 2001.3.13부터 서울에서 개최되기로 예정되었던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은 회담 당일 북측이 특별한 이유 없이 무산시킴으로써 남북간의 대화전망을 불투명하게 하였다.

차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자체에 회의적인 견해가 제기되었다.<sup>6)</sup>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측은 그 동안 우리 정부의 거듭된 답방 요청에 공식적인 대답을 회피하던 태도를 바꾸어 외무성 대변인의 인터뷰 형식을 빌어 “2차 정상회담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sup>7)</sup>

국내의 거부감과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포기되지 않았던 정부의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성사시키려는 노력은 우여곡절 끝에 금강산에서 개최된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결렬되면서 당분간 탄력을 잃게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까운 시일내 당분간 답방 성사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부는 대북 기대치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외신(로이터 통신, 11. 28)과의 회견을 통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김위원장이 반드시 서울을 답방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하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순시 중 지역의 인사들과 같이 한 자리에서 “앞으로 대북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되 무리하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과 무관하지 않다.(한국경제신문, 11. 24) 이 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대북정책을 다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으며 다음 정권이 하고 또 그 다음 정권이 해서 통일로 가는

6) 야당은 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추진하는 것이 “정국반전의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 이상 구걸하지 말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일보, “DJ 답방러브콜 8번,” 2001. 6. 17.

7)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 기자와의 인터뷰(연합뉴스, 6.26). 그러나 북한은 같은 달 15일자 로동신문에서 남북공동선언 내용을 게재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부문을 생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의지를 의심케 한 바 있다.(연합뉴스, 6.26)

것”이라고 입장을 피력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갖는 의미를 과소평가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향후 김 위원장의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되 답방 자체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어쨌든 현정부의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은 대내외적인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더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동안 북한이 보여 왔던 불가측성을 고려할 때,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김정일 위원장의 돌연한 서울 답방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볼 때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답방을 유보할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 국내정치적 상황은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유인 동기를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으며, 북·미 관계의 획기적 개선 전망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좀더 많은 인내심을 요하는 문제라고 하겠다.

## 나. 당국간 회담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1년 첫 신년 「공동사설」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고, 1월 10일 정부·정당·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에서 다시 한번 남북공동선언을 확인하면서 그 실천의지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남북장관급회담 등 제반 남북대화를 통해 6·15 공동선언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실천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가 평화와 화해협력의 방향으로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 일환으로 남북장관급회담 쌍방 수석대표(박재규 통일부 장관, 전금진 내각책임 참사)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쌍방 위원장(이정재 재경부 차관, 박창련 국가계획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1월 8일부터 각각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에 관한 협의를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시작하여 1월 30일 최종문안에 합의하였고, 2월 3일에는 합의문건을 상호 교환하였다.

「경제협력추진위 구성·운영합의서」에서는 남북장관급회담 산하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면서, 위원회는 남북한 각각 1명(차관/부상급)의 위원장과 위원 4~6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의 합의 또는 위임에 따라 쌍방 당국 사이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주관하며,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쌍방 당국 사이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이행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하기로 하고, 필요한 경우 합의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실무협의회들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경제협력추진위 제1차 회의 합의문」을 통해서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전력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전력협력실무협의회」와 「전력실태공동조사단」을, 그리고 임진강수해방지사업의 협력을 위해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와 「임진강수해방지공동조사단」을 각각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남북전력협력실무협의회」 및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각각 2월 7~10일과 2월 21~24일 평양에서 개최하여 전력실태조사와 임진강유역조사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 연결 및 문산~개성간 도로개설, 개성공단(공업지구) 건설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2001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실무협의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한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01년 2월 하순경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날짜는 추후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던 남북 당국간 대화는 그러나 3월 13일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무산됨에 따라 난관에 부딪혔다. 회담 당일 오전 북측의 전금진 단장은 박재규 남측 수석대표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회담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다고 통보함으로써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하였다. 이후 남북관계는 부시 미국행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북한 상선의 우리측 영해 무단 통과, 8·15 남북공동행사(평양)시 물의 야기 등으로 인해 정체 상태에 빠졌다.

9월 11일 미국에서 테러가 발생하고 국제정세가 불안정, 불투명한 가운데서도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9. 15~18, 서울)이 성사됨에 따라 남북관계가 약 6개월 동안의 소강상태를 극복하고 새롭게 발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였다. 수석대표(남측 홍순영 장관, 북측 김령성 단장)를 포함한 쌍방대표단이 대폭 교체된 이 회담은 대표단 전체회의 3회, 수석대표 단독접촉 및 실무접촉 등의 논의를 통해 합의된 사항을 공동보도문 형식으로 발표(9. 18)하였다.

공동보도문에서 남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 및 빠른 시일내 분야별 실무협의 개최에 합의함으로써 다양한 분야별로 당국간 회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그동안 남북간에 합의는 되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협력사업의 실질적 이행을 기대할 수 있게 하였다.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착수, 금강산 육로 개설을 위한 당국간 회담 개최, 임진강유역 조사 착수, 태권도시범단 교환 등이 합의되었다.

남북은 제5차 장관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10월 3~5일 금강산에서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양측은 육로관광을 비롯한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10월 19일부터 제2차 회의를 갖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후 북한은 대미 테러발생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발발 이후 우리측이 행한 경계강화조치가 대화 분위기를 흐뜨리고 북한인사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등 제5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일련의 당국간 남북대화를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10월 28~31일 개최하기로 합의되었던 제6차 장관급회담은 북한이 북한대표단의 신변안전을 이유로 회담의 장소를 금강산지역으로 고집하고, 이에 반해 우리측이 평양 혹은 묘향산 등을 주장하면서 연기되다가 11월 9~13일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제6차 장관급회담에서는 우리측의 테러관련 경계태세에 관한 북한의 인식과 제5차회담 합의사항 일정 조정에 대한 쌍방의 입장 차이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북한은 우리측의 경계강화조치가 그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례적인 군사훈련, 미 공군력 증강 등이 6·15 공동선언 정신을 위반한 것으로서 북측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며 남북 합의사항 이행에 장애를 조성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우리측으로부터 경계강화조치를 취한 데 대한 납득할만한 대답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측은 그 조치가 우리 내부조치로서 북측을 겨냥할 이유도, 의사도 없었다는 점을 밝히면서 북측이 문제 제기할 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일정조정과 관련하여는 12월초 이산가족방문단 상봉, 제7차 장관급회담의 서울 개최 등에는 의견접근을 이끌어 내었으나,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장소, 제7차 장관급회담 시기 등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현 정세에 대한 입장차이, 회담 개최장소에 대한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제6차 장관급회담에서는 합의서(공동보도문)가 발표되지 못하였다. 제6차 회담을 통해 현안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남과 북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국제정세가 긴장될수록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평화공존 프로그램과 교류·협력행사를 착실히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정세의 전환기적 상황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민족적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남북간 오해가 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 군사훈련 사전통보 등 신뢰구축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 등을 직시하도록 북한에 촉구하면서 남북관계가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 2. 군사안보 분야

군사안보와 관련해서 2001년도에 가장 중요한 사업은 경의선 철도 복원과 도로공사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자간의 대화였다. 양측 군대의 합의하에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도로와 철도를 놓는다는 것은 군사적 의미 못지 않게 남북관계 전반에 미치는 상징적 효과가 큰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남북 양측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협상을 연초에 제4차 군사실무회담(1. 31)과 제5차 군사실무회담(2. 8)을 개최하고 협상을 진행해 나갔다. 특히 제5차 실무회담에서는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철도와 도로 건설작업을 위한 “DMZ 공동규칙안”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북한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인해 후속 실천조치나 추가적인 합의가 없는 상황이다. 제5차 장관급회담 이후 남측은 군사실무회담을 다시 제의(10. 6)했지만 북한에 의해 거부되었다. 2001년 말까지

남한은 DMZ 남북한계선까지 경의선철도 연결 관련 기초공사를 완료한 상태지만 북한은 아직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전반적인 남북 관계가 경색국면에 접어들었음을 감안할 때, 북한당국이 당분간은 경의선 철도와 도로 개설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1년 한해는 남북간의 정치적 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군사안보분야의 관계도 문제의 해결보다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북한 경비정이 두차례 북방한계선을 침범(4. 9, 11. 18)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북한 선박도 북방한계선을 침범했다(6. 24). 급기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에서 아군에 총격을 가하는 사건(11. 27)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2001년은 군사안보분야의 사건이 정치적 대화에 커다란 장애가 되는 과거의 남북대화 패턴을 답습하는 해이기도 했다. 9·11 테러 사태에 대응해서 남한이 비상경계태세를 발동한 것이 빌미가 된 것이다. 북한은 비상경계태세에 따른 안전을 이유로 제6차 장관급회담을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고집했다. 지루한 공방 끝에 금강산에서 개최된 제6차 회담에서 북한은 비상경계태세가 북한을 겨냥한 것이므로 즉각 해제할 것을 요구했고, 남한은 주한 외교사절을 보호하고 국내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제6차 장관급회담은 결국 비상경계태세에 대한 남북한의 상이한 인식 차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결렬되었다.

한편 북한에게 있어서 2001년은 러시아와의 군사안보협력관계를 다지는 한 해가 되기도 했다. 북·러간에 “방위산업 및 군사장비 분야의 협력협정”과 “2001년도 군사협력협정”이 체결(4. 27)된 것이다. 아울러 김정일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김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시 발표된 모스크바선언(8. 4)에서 양국간에 정치, 경제, 군사 등 다방면에서 상호협조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향과 조치에 합의하고 관



런 협정이 체결된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2002년도에는 미국에 대한 비행기 납치테러와 세균테러 사건을 계기로 남북간 군사대화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북한이 테러행위의 전력을 갖고 있고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러한 예측에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는 테러근절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간 회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치적 관계가 정체되는 상황에서 군사적 측면에서 관계진전을 이루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이 한반도의 군사문제를 미국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바꾸어서 남북군사회담에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간의 정치적 관계가 어느 정도 무르익고 신뢰가 조성되어야 한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남북군사대화의 물꼬를 2002년도에 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남북국방장관회담이나 기타 군사회담의 개최가능성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이 테러에 대한 명시적인 입장전환을 하지 않는 한 남북한의 관계도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다. 남한은 “테러반대 남북선언”과 같은 가시적인 합의를 도출해내려고 시도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정치·군사적 분야의 당국간 대화에 미온적일 것임을 감안할 때, 성사가 능성은 불투명하다.

2002년도 남북군사대화에서 테러문제와 함께 주요 의제로 다뤄질 사안이 북한의 화학·세균무기 보유문제이다. 사실 남한은 지금까지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발생한 탄저균에 의한 테러사건으로 생화학테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므로 향후 남북대화에서 이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 3. 교류·협력분야

#### 가. 경제분야

##### (가) 남북교역

2001년 남북교역은 전년도에 비해 규모면에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1~10월중 남북교역액은 3억 2,973만달러로 전년 동기 3억 6,576만달러 대비 9.9% 감소하였다. 이중 반입액은 1억 3,326만달러로 전년 대비 6.7% 증가하였으나, 반출액은 1억 9,647만달러로 18.4%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교역액 감소는 국내경기 침체, 인천~남포항간 물자 운송 차질, 남북경협 제도의 미비, 전반적인 남북관계 소강상태 등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교역량은 거래성 교역(상업적 매매거래, 위탁가공 교역) 및 비거래성 교역의 양부문에서 동시에 감소하였다. 거래성 교역은 1억 8,427만달러(반입 1억 3,120만달러, 반출 5,307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하고, 전체 교역액의 55.9%를 차지하였다. 이중 상업적 매매거래는 7,965만달러(반입 7,084만달러, 반출 881만달러)로 13.6% 감소하고, 전체교역액의 24.2%, 거래성 교역액의 43.2%를 차지하였다. 위탁가공 교역은 1억 462만달러(반입 6,036만달러, 반출 4,426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하고, 전체교역액의 31.7%, 거래성 교역액의 56.8%를 차지하였다.

비거래성 교역은 1억 4,546만달러(반입 206만달러, 반출 1억4,34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4% 감소하고, 전체교역액의 44.1%를 차지하였다. 비거래성 교역의 대부분은 대북 지원용 및 협력사업용 물자의 반출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대북 지원용 물자의 반출은 9,882만달

리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전체교역액의 30.0%, 비거래성 교역액의 67.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협력사업용(경수로, 금강산관광, 기타 협력사업 등) 물자의 반출은 4,12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수지면에서 살펴보면 2001년(1~10월) 명목수지는 남한이 6,321만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비거래성 교역을 제외한 실질수지는 북한이 7,813만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2001년(1~10월) 남북교역 참여업체는 351개(위탁가공업체 115개)이며, 교역 품목수는 623개(위탁가공교역 품목 261개)로 나타났다. 남북교역에서 주요 반입품목은 농림수산물, 섬유류 등이고 주요 반출품목은 화학공업제품, 섬유류가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2000년 11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인천~남포간 선박운행 차질에 따라 피해를 입은 교역업체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저리(3~4%)의 교역자금 대출을 통해 6월말부터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하였다. 한편 정부는 인천~남포간을 부정기로 운행하고 있는 (주)국양해운에 대해 정기운행을 승인(4.18)하는 등 남북을 연결하는 항로의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 그렇지만 투자보장 및 상사분쟁해결절차 등 남북경협에 있어 필수적인 4개 합의서가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소강상태로 인해 발효되지 않고 있어 남북교역에서의 제도적인 미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남북교역은 지난 3년 동안의 교역패턴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가공교역은 북한이 산업 기술 및 전자부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초보적 전자 및 기계부품 조립과 가공생산 등에서는 어느 정도 증가가 예상된다. 그렇지만 상업적 거래는 북한의 생산능력이 단시일내에 제고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기대하고 있는 대북 지원 등을 포함

한 비거래성 교역은 우리의 대북포용정책 기조가 지속되더라도 국민 여론의 항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확대되기 어려울 것이다.

< 표 3-1 > 남북교역 현황

(단위: 천달러)

	반 입				반 출				합 계			
	총액	상업	위탁	비거래	총액	상업	위탁	비거래	총액	상업	위탁	비거래
1995	222,855	201,141	21,174	0	64,436	28,723	24,718	10,995	287,291	230,404	45,882	10,995
1996	182,400	146,162	36,238	0	69,639	17,220	38,164	14,255	252,039	163,382	74,402	14,255
1997	193,039	150,175	42,894	0	115,270	23,845	36,175	55,250	308,339	174,020	79,039	55,250
1998	92,264	50,787	41,371	105	129,679	21,914	29,617	78,149	221,943	72,701	70,988	78,254
1999	121,604	67,746	53,736	122	211,832	21,670	45,883	144,279	333,436	89,416	99,619	144,401
2000	152,373	78,551	71,966	1,856	272,775	36,499	57,224	179,052	425,148	115,050	129,190	180,908
2001	133,330	70,842	60,330	2,058	196,468	8,809	44,261	143,397	329,728	79,651	104,621	145,457

주 1. 1995년 교역금액은 대북 쌀지원 237,213천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2. 2001년은 1월부터 10월까지의 실적임.

< 표 3-2 > 남북한 비거래성 교역 현황

(단위: 천달러)

	총액	반 입	반 출					
			소계	중유	대북지원	경수로	금강산	협력사업
1995	10,995	0	10,995	10,778	217	0	0	0
1996	14,255	0	14,255	12,782	1,473	0	0	0
1997	55,250	0	55,250	29,019	8,388	17,843	0	0
1998	78,254	105	78,149	19,819	15,628	3,954	37,551	1,197
1999	144,401	122	144,279	39,512	43,426	14,434	40,575	6,332
2000	180,908	1,856	179,052	7,192	104,477	35,609	14,608	17,166
2001	145,457	2,058	143,397		98,820	25,734	7,312	8,075

주 : 2001년은 1월부터 10월까지 실적임.

## (나) 협력사업

남북 당국자간에 이미 합의된 경제협력사업은 2001년 들어와서 실질적인 진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0년 12월 개최된 제4차 장관급회담(12. 12~15)의 후속 조치로 2001년 2월 평양에서 ‘남북전력협력실무협의회’(2. 8~10)와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2. 22~24) 제1차 회의가 각각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양측은 전력협력 및 수해방지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세부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제4차 회담 이후 9개월만에 재개된 제5차 남북 장관급회담(2001. 9. 15~18, 서울)에서 남북은 경제부문 현안에 대해 상호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철도(서울~신의주)와 도로(문산~개성)를 우선 개성공단에 연결키 위한 공사 착수 및 조기 개통, ② 개성공단 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한 실무접촉 및 구체적 실천계획 확정, ③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회담 개최 및 육로관광 문제 협의, ④ 남과 북, 러시아 사이의 철도연결 및 가스관 연결사업 검토, ⑤ 민간선박들의 상호 영해통과 허용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해운 관계자들의 실무 접촉 조기 개최, ⑥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문제와 관련 11월중 현지조사에 착수, ⑦ 투자보호,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4가지 합의서들을 각기 내부절차를 거쳐 조기 발효, ⑧ 북측 동해어장의 일부를 공동 이용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자들 사이의 조기 접촉 등에 합의하였다. 이상의 경제실무적 문제들의 구체적인 이행대책들은 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해당부문 접촉을 통해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제5차 장관급회담을 계기로 부시행정부의 등장으로 인한 북미관계의 악화로 소강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의 진전이 기대되었고,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사업 및 정부차원의 대북 지원 및 협력사업에 대

한 전망이 밝아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1월 금강산에서 개최된 제6차 장관급회담(11. 9~13)이 결렬됨에 따라 남북관계는 다시 소강 상태에 돌입하게 되면서 당국간 합의된 경제협력사업의 빠른 진척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현대는 자체 자금난과 관광객 감소로 금강산관광사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2000년 11월부터 북측과 협상을 시작해 왔다. 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현대는 ① 관광객 수에 따른 대가지급 방식으로의 변경, ② 육로관광 실시, ③ 관광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북측에 요구하였다. 이러한 현대의 요구 사항이 상당 수준 반영된 합의(6. 8)가 도출됨에 따라 정부는 금강산관광사업 공동 수행을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사업(자)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6. 23)하였다.

금강산관광사업에 참여하게 된 한국관광공사는 육로관광 등으로 관광사업이 활성화되어 사업자의 자체적인 자금확보가 가능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필요한 긴급운영자금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해 줄 것을 정부에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금강산관광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을 대출해 주었다. 그렇지만 현대와 북측간의 추후 협상에서 기합의된 육로관광 실시 등에 있어 전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금강산관광사업은 관광객 감소로 동해에서 출항하는 관광선의 운항이 중단되었고, 속초에서 출항하는 설봉호도 단축 운항되고 있다. 정부도 더 이상 금강산관광사업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온 햇볕정책의 최대 성과로 주목받아 온 이 사업은 준폐의 위기에 있다.

정부는 2001년(1~11월)까지 신규로 5개사에 대해 경제협력사업자로 승인했으며, 이중 4개사에 대해서는 협력사업을 승인했다. 협력사업

승인 획득 기업은 IT분야의 (주)하나비즈닷컴(사업내용: 평양정보센터와 협영으로 남북 프로그램 공동개발, 공동 개발단지 조성 등을 위해 중국 단동에 「하나프로그램센터」 설립)과 (주)엔트랙(광명성총회사와 협영으로 정보기술협력사업 및 공동제품개발 협력사업을 위해 평양에 「고려기술개발제작소」 설립), (주)G-한신(광명성총회사와 합작으로 평양에 유리제품 생산공장 설립), (주)국양해운(개선무역총회사와 인천~남포간 선박운행과 관련, 낙후된 남포항의 하역설비 개선에 따른 시설 제공) 등이다. (주)IMRI(삼천리총회사와 합작으로 평양에 발포성 수지 생산공장 설립)는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다.

2001년에는 다른 분야에 비해 IT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민경련·광명성총회사와 공동으로 평양시 통일거리 부근에 IT관련 벤처산업단지인 ‘고려기술개발제작소’를 조성하기로 계약서를 교환(3. 17)한 (주)엔트랙은 연말까지 각각 500평 규모의 7개 연구개발동과 교육관리동을 신축하는 한편 2002년까지 5,000평 규모의 대형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국내 벤처기업인들의 방북을 주선해온 (주)하나비즈닷컴은 평양정보센터(PIC)와 공동으로 중국 단동시 개발구에서 컴퓨터 및 산업용 소프트웨어, 게임, 애니메이션 등을 개발하는 ‘하나프로그램센터’ 개업식을 개최(5. 10)했다.

IT산업 관련 기업과 기관 대표로 구성된 제4차 남북IT교류협력사업 방북단은 7월중 북한을 방문(7. 24~28)하고 평양정보센터 등과 공동으로 평양 시내에 시범 인터넷사이트의 구축을 비롯, 가상현실 연구 및 애니메이션 개발 등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방북단 중 네트워크 장비 생산업체인 다산인터넷트는 삼천리총회사와 평양 시내 20개 기관에 2Mbps급 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SDSL)망을 시범적으로 구축·운영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하기로 정식 합의했다. 애니메이션 분야 전문 벤처기업인 민족네트워크도 평양정보센터와 애니메

이선 공동제작을 위한 정식계약을 체결(8. 1)했다.

2002년도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의 전망은 밝은 편이 아니다. 북한이 IT산업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협력사업의 진전은 기대되지만 금강산관광사업과 같은 대규모 협력사업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차원의 협력사업(경의선 철도 및 도로 개설, 임진강 수해방지 공동사업 등)과 민간차원의 대규모 사업인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사업은 북한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의 성의있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사회문화분야

2001년도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방북 및 주민접촉에 있어 양적인 측면에서 전년도에 미치지 못했다. 2001년 10월말까지 분야별 방북자 현황을 보면, 체육 35건(293명), 문화예술 9건(133명), 언론출판 10건(78명), 교육학술 10건(67명), 종교 7건(56명), 과학환경 2건(13명) 등이다. 주민접촉의 경우 종교 9건 (86명), 교육학술24건(78명), 문화예술 (9건 54명), 과학환경 19건(34명), 언론출판 10건(25명), 체육 8건(21명) 등이다.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의 경우 4건 172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현저한 감소세를 나타냈는데, 사회문화분야의 경우 체육분야의 1건(1명)에 머물렀다. 2001년의 경우 8.15 방북단 파문사건에서 보여지듯이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으며, 남북교류가 남북한의 냉전문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었다.

교육·학술분야의 경우 2001년 3월 사운연구소와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가 공동주관으로 ‘일제 강제병합 남북공동 자료전시회 및 학술토론회’를 평양에서 개최하였다. 제3국 접촉으로 2월 중국 연길에서 ‘Korean 컴퓨터처리 국제학술회의’가 열려 국어정보학회와 북한 과학



기술총연맹 조선어 신식학회 및 중국측 관계자가 참석하여 연구자료를 상호교환했다. 동 학술대회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사되고 있다. 4월에는 런던의 '제20차 유럽한국학회 학술대회'에서 남한의 유럽한국학회 관계자와 북한측이 참석하여 문학·실학·고고학 등에 대한 논문 발표가 이루어졌다. 교육학술분야의 협력사업으로는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구 연변과기대 후원회)이 2001년 6월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 건립·운영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그 동안 문화·예술분야는 북한측의 기피와, 공연 등의 경우 상당한 준비와 비용이 소요되는 특성상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1998년 리틀엔젤스 평양공연이후 문화예술분야의 교류·협력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성사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2001년 2월, 평양봉화 예술극장에서 남원 시립국악단이 방북하여 북한측과 춘향전을 공연했다. 3월에는 김한길 문화부 장관의 방북이 성사되었으며, 6월에는 남한측 관계자 50여명이 방북하여 평양에서 민족옷 전시회를 열었다. 또한 남북 공동 사진전인 '백두에서 한라까지'가 6월에는 평양, 8월에는 서울에서 교차 전시되었다.

종교분야의 경우 대북 지원성 측면이 강한 바, 지속적인 방북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1년 3월 금강산에서 진요한 조국통일 기독교동지협의회 회장 등 7명이 참석하여 부활절 연합예배를 개최하였으며, 4월에는 남북종교인평화모임 변진홍 KCRP 사무총장 등 31명이 방북하여 평양에서 관련행사 개최를 협의하였다.

체육분야는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1년도에도 이와 같은 추이를 이어갔다. 3월에는 조총련계 양규사 선수가 국내프로축구단에 입단하였고, 6월에는 김운용 대한체육회장의 방북이 성사되었다. 7월에는 통일염원 6. 15 금강산랠리대회가, 8월에는 국제 금강산 모터사이클 투어링이 개최되어 금강산관련 스포츠행사의 새로

운 가능성을 열었다.

언론·출판분야의 경우 북한측이 기피하는 분야였으나, 최근 활성화 되고 있다. 2001년도에도 전년도의 추이를 이어갔으며, 'MBC·한겨레의 남북노동절행사 취재', '한겨레·민족21의 금강산대토론회' 취재 등이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남북한 공동행사가 상당수 성사되었다. 6월에는 6.15 민족대토론회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으며, 8월에는 2001민족통일대축전이 평양에서 열렸다. 4월 금강산에서 노동절 남북공동행사와, 7월의 남북농민통일대회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2001년 대북포용정책의 지속에 따라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경향을 보였으나, 2001년 부시행정부의 출범과 남북관계 진전의 지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한반도 냉전체제의 영향 등으로 전년도에 미치지 못했다. 2001년의 경우 남북관계의 진전 속도가 예상보다 지체됨으로써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특히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공연 등 2000년 성사되었던 사회문화 분야의 북한주민의 남한 방문이 2001년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확대와 더불어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아직 한반도에는 냉전의 구조영향이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냉전문화는 변화의 조짐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1년 8.15 방북단 파문은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분단이후 337명의 민간 방문단을 구성하여 남북화해를 목표로 치러졌던 이 행사는 그 중요한 의의가 진행과정의 문제들로 묻혀버리고 말았다.

2002년 남북 사회문화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은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추이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은 지속될 것이며, 대북포용정책 이후 점차 정례화·다원화되고, 사업형태도 다양해지는 기본추세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분야의 상호 방문 공연이 지속될 것이며, 특히 월드컵을 계기로 체육교류 및 관련 사회문화 교류·협력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와 병행하여 체제이완에 대한 북한당국의 우려가 고조될 것인 바, 상징성이 큰 이벤트 중심으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반면 소규모 민간분야의 교류·협력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 4. 인도주의 사안

##### 가. 이산가족문제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과정에서 추진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2000년 8월부터 2001년 2월에 걸쳐 세 차례의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한 차례의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으로 가시적 성과를 나타냈다. 통일부 집계·발표에 따르면 ‘6·15남북공동선언’이후 세 차례의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통해 603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총 3천600여명의 가족·친척을 상봉했으며 남북한 각각 300명씩의 서신을 교환했고 총 1만여 명의 생사가 확인되었다.<sup>8)</sup>

특히 올해는 연초 김정일 위원장의 ‘신사고’ 발언과 함께 북한이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의지를 거듭 밝힘에 따라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올 한 해 동

8) 통일부 인도지원국, 『남북이산가족 교류협력 실무안내』 (서울: 통일부, 2001. 6), p. 32.

안의 성과는 제3차 상봉이 성사된 것과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이 시범사업으로 행해진 것 외에는 없다. 현재 제4차 상봉이 합의만 이룬 채 실시가 무기한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다.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2001. 1. 29~31)에서 합의된 일정대로 지난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 제3차 상봉 때에도 1·2차 때와 마찬가지로 남북한 각각 100명씩의 이산가족들이 서울~평양간 항공로를 이용하여 서울과 평양에서 단체 및 개별 가족 상봉을 하였다. 특히 3차 상봉에서도 제2차 상봉 때에 성사된 남북 동진27호 갑판장 강희근씨의 모자 상봉과 국군포로 이정석씨의 가족상봉에 이어 남북 대한항공기 여승무원 성경희씨의 모녀 상봉과 두 명의 국군포로 출신의 가족 상봉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동안 미해결의 난제로 남아있던 남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있어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남북이산가족의 서신교환은 2001년 3월 15일에 시범사업으로 행해졌으며 생사·주소가 확인된 남북이산가족 각각 300명씩의 편지가 남북적십자사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일괄 교환되었다. 일반적으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단계적·점진적 해결에 있어서는 상봉 이전에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우리 당국의 일관된 방침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범사업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일단 생사·주소 확인에 따른 서신교환 사업이 성사되었음은 올해 남북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있어 주요 성과의 하나라고 하겠다.

제5차 장관급회담(9. 15~18)에서 합의되어 지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었던 제4차 이산가족 상봉은 현재 성사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제4차 이산가족 상봉은 상봉사업이 합의되기까지에도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이후 납득할 만한 해명 없이 남북대화해 소극적으로 응하던 북한은 지난 3월13일부터 16일까지로 예정되었던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 당일에 일

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하는가 하면, 4월 3일부터 5일까지로 예정되었던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도 북측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sup>9)</sup> 태권도시범단 교환 등 5개항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4차 상봉을 불과 나흘 앞두고 돌연 남측의 ‘비상경계조치’를 문제삼아 이산가족 방문단과 태권도시범단 교환을 유보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도 회담장소를 ‘금강산’으로 고집함에 따라 예정된 회담일정이 취소되는 사태를 빚었다.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은 남측이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고, 남북 화해협력의 기초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금강산 회담을 수용하여 지난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북한은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사항 이행의 전제조건으로 남측의 ‘비상경계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예정일을 이틀이나 연장하면서까지 진행된 회담은 결국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결렬되었고, 이산가족 상봉은 또 다시 무기한 유보되고 말았다.

---

9)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은 별도의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 없이 전례에 따라 서울과 평양을 동시 교환방문하는 것으로 합의함.

< 표 3-3 연도별 남북이산가족교류 현황 >

연도별 구분	'85	'90	'91	'92	'93	'94	'95	'96	'97	'98. 2.	소계 (평균)	'98. 3-12	'99	'00	'01. 1-11	소계 (평균)	총계	
민간차원	생사 확인		3	127	132	221	135	104	96	164	24	1,038 (120)	353	481	447	191	1,472 (401)	2,510
	서신 교환		4	193	462	948	584	571	473	772	85	4,132 (477)	384	637	984	524	2,529 (600)	6,661
	제3국 상봉			11	19	12	11	17	18	61	8	163 (19)	100	195	148	150	533 (162)	756
	방북 상봉											-	1	5	4	5	15	15
	당국차원	6										65			792	744	1,536	1,601
당국차원	서신 교환													39	623	662	662	
	방남 상봉	3									30			201	100	301	331	
	방북 상봉	3									35			205	100	305	340	

통일부, 「남북이산가족 교류협력 실무안내」, (서울: 통일부, 2001)

지난 12월 11일 대한적십자사는 제4차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의 연내 재개를 북한에 제의했으며, 상봉장소에 대해서는 조건을 가리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상봉 실현의 의지를 적극 피력하였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8월 10일에도 적십자회담 조속 개최와 90세 이상 1천8백여 명 상봉 또는 생사확인 우선 실시 등을 북한에 제의한 바 있다.

2002년에는 유보되었던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2002년 4월부터 2달에 걸쳐 개최되는 '아리랑 축전'을 성대하게 치르기 위하여 남한 주민들의 참가를 희망할 것이고, 이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급 남북회담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상반기에 이산가족 상봉이 한차례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나, 이후에는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의 진전에 따라 이

산가족 문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나. 납북자와 미송환 국군포로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전쟁 기간 중 북한에 억류된 미송환 국군포로는 1만 9천 여명으로 추산된다. 그 동안 남한은 이들의 송환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측은 이를 거부하였다. 미송환 국군포로들은 실태는 탈북·귀환한 국군포로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바, 그들은 감시대상으로 분류되어 각종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1년 말까지 귀환한 국군포로는 모두 17명이며 2000년 말까지는 모두 23명이다. 그러나 1999년 3월 귀환한 손재술 씨는 1년 뒤 질병으로 사망하여 현재는 22명이 남한에 거주하고 있다.

2000년 말 현재 정부가 신원을 확인하여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미송환 생존 국군포로의 수는 모두 385명이다. 이러한 숫자는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과 귀환 국군포로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집계된 것이다. 정부는 국군포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총리실,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국가보훈처 등 관계부처 국장급 11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군포로대책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있다.

납북자 문제와 관련, 휴전 이후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은 총 3,790명이고, 이 중 현재까지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총 487명이다. 납북된 사람의 대부분은 어부들로 1955년 5월 「대성호」와 어부 10명을 강제 납치한 후 총 3,692명이 어부들을 납치하였다가 3,256명을 돌려보내고 현재까지 436명의 어부를 억류하고 있다. 또한 1970년 6월 5일 납치한 해군 I-20정 승무원 20명 전원과 선박을 억류하고 있으며, 1969년 12월 11월 대한항공 여객기와 함께 납치한 승무원과

승객 중 12명을 억류하고 있다. 또한 해외근무 또는 유학중 납치된 사람이 12명이고, 여름방학중 해안가에서 납치된 고등학생이 5명이다.

그리고 북한은 1979년 4월 노르웨이에서 고상문 납한 교사와 1995년 7월 안승운 순복음교회 목사 등을 납치·억류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납북억류자가 북한에 더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납북억류자들 중 일부는 대남선전과 간첩교육에 이용되고 있다고 북한이탈주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가치가 없는 일부 납북 억류자들은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994년 7월 30일 AI가 밝힌 49명의 정치범 명단에 고상문과 유성근 등 납북자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1999년 1월 국가정보원은 이재환 등 납북·월북자 22명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99. 1. 24)과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인도주의 입장에서 국군포로·납북자와 출소공산주의자의 맞송환을 위한 남북 당국간의 대화를 촉구하였다. 남한은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납북자와 국군포로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북한은 『북한에는 국군포로는 말할 것도 없고, 이의 입북자는 있어도 납북자는 한 명도 없다』고 이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당국이 지난해 제2차 남북 이산가족 평양상봉에서 남북선원과 남쪽의 어머니의 상봉을 허용하였으며, 지난 2월의 제3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정에서 KAL기 납치사건에서 송환되지 않았던 승무원 성경희씨와 국군포로 출신 김재덕, 손원호씨 가족이 상봉하였다. 정부는 이와 같이 납북자나 국군포로를 특수 이산가족으로 간주하고 광의의 이산가족의 범주에 넣어 점진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북한도 1월 평양방송을 통하여 동진호 가족의 상봉을 거론하면서 새로운 사고를 강조하는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차원에서 이들의 문제를 다룰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무산된 제4차



이산가족 상봉에서는 국군포로 5명, 납북자 5명 등 특수이산가족이 후보에 포함되었으나 북한이 이들의 ‘확인 불가능’으로 회담함에 따라 상봉단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정부는 남북 장관급회담 및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재개되면 국군포로 문제를 의제로 제기할 예정이다. 이산가족 상봉이 지속되면 특수이산가족의 범주에 포함하여 납북자 및 국군포로 가족의 상봉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제3국을 통한 개별적인 남한 귀환도 꾸준히 늘 것으로 전망된다. 납북자나 국군포로 문제는 상봉과 생사확인 등 실질적인 효과가 가장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조용한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남한의 관련 가족들은 송환 등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함으로써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한 남한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다. 대북지원

국제사회는 1995년 6월 이후 2001년 11월말까지 총 21억 887만 달러 상당의 대북지원을 제공하였다. 한국은 그 가운데 6억 313만 달러를 지원하여 국제사회 총지원액의 28.6%를 차지한다. 2001년도 우리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총 1억 2,656만 달러(정부 7,007만 달러, 민간차원 5,649만 달러)를 제공하였으며, 국제사회는 유엔기구를 통한 통합지원(2억 1,234만 달러), 개별국 직접지원(1,153만 달러), 국제 GNO를 통한 지원(2,143만 달러) 등의 방식으로 총 2억 4,53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2001년도 국내 대북지원액은 지난해 대비 11.3% 증가한데 그쳤으나 국제사회 전체 대북지원액(3억 7,303만 달러)의 33.9%를 차지하였다(표 참조). 국내의 대북지원액은 농업복구분야(5,476만 달러) 43%, 보

건의료분야(1,967만 달러) 16%, 일반구호(5,213만 달러) 41%로 이루어졌다. 지원품목은 정부가 지원한 비료 20만톤을 포함하여 옥수수, 밀, 가루, 양수기, 짐자전거, 경운기, 손수레, 의류, 의약품, 의료기구, 젓소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1999. 10 제정)에 근거하여 2001년 월드비전, 유진벨재단 등 14개 민간 대북지원단체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75억 7천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2001년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던 작년과는 달리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은 작년에 비해 11%가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에 힘입어 민간차원의 지원액은 오히려 60.8%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전반적인 지원량은 늘어났다.

정부는 대북 비료지원 3년 차의 추진으로 비료 20만톤(5. 2~6. 5)의 지원을 실시했고 내의 150만벌(3월)을 전달하였다. 정부는 또한 WFP를 통해 옥수수 10만톤(4월), WHO를 통해 말라리아 약품(5월)을 각각 지원하였다. 민간차원에서는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에 힘입어 대북지원 금액이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대북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관계자들의 방북활동이 작년의 148명(41건)에서 366명(78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지난 해 대폭 감소했던 것과는 달리 35.6%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어 상대적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낮아져 국제사회의 지원규모가 50%나 감소했었다. 그러나 2001년 들어 UN기구와 NGO가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실시함으로써 UN기구와 국제NGO의 대북지원 규모가 각각 38.7%, 36.2% 증가하였다. 개별국의 대북지원은 지난해에 비해 11% 감소하였으나 WFP를 통한 일본의 쌀지원 50만톤(1~10월), 베트남의

쌀지원 5,000톤(4월), 독일의 쇠고기 1차 선적분 6,000톤(6백만 달러 상당, 11. 12) 등이 주를 이루었다. 중국의 장쩌민 주석은 방북기간(9. 3~9. 5) 중 식량 20만톤과 디젤유 3만톤의 무상원조를 약속했으며, 호주(10.20)와 유럽연합(10월)은 밀과 겨울옷 지원을 각각 발표했고, 말레이시아도 비료지원을 천명(5월)했다. 미국도 식량 10만 톤을 지원하기로 발표(5월)하였으나 아직까지 실시되지 않고 있다.

2001년 NGO의 대북지원 활동이 크게 증가한 데에는 서울에서 개최(6. 18~20)된 「국제NGO회의」가 큰 역할을 하였다. 북경, 동경에 이어 서울에서 개최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국제NGO회의」는 남북정상 회담 이후의 대북지원 상황의 변화와 농업 및 보건·의료분야의 대북지원, UN기구와 NGO 및 정부·기업 사이의 상호협력, NGO의 역할 등에 관해 실제적인 문제점과 대응책을 논의함으로써 대북지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 표 3-4 > 분야별 대북지원 개요

단위: 만 달러 (괄호안은 백분율)

구 분	'95.6	'96	'97	'98	'99	2000	2001	누 계
일반구호	23,225 (100)	455 (99)	4,329 (92)	2,891 (91)	565 (12)	1,434 (13)	5,213 (41)	38,112 (63)
농업복구		5 (1)	205 (4)	254 (8)	3,941 (84)	8,562 (75)	5,476 (43)	18,443 (31)
보건의료			189 (4)	40 (1)	182 (4)	1,380 (12)	1,967 (16)	3,758 (6)
계	23,225 (100)	460 (100)	4,723 (100)	3,158 (100)	4,688 (100)	11,376 (100)	12,656 (100)	60,313 (100)

자료: 통일부 인도지원국

&lt; 표 3-5 &gt; 국제사회 지원액 대비

단위: 만 달러

구 분		'95.6	'96	'97	'98	'99	2000	2001	누계
한 국	정부	23,200	305	2,667	1,100	2,825	7,863	7,007	44,967
	민간	25	155	2,056	2,085	1,863	3,513	5,649	15,346
	계(A)	23,225	460	4,723	3,185	4,688	11,376	12,656	60,313
국제사회(B)		5,565	9,765	26,350	30,199	35,871	18,177	24,647	150,574
총계(A+B)		28,790	10,225	31,073	33,384	40,559	29,553	37,303	210,887
A/A+B(%)		80.7	4.5	15.2	9.5	11.6	38.5	33.9	28.6

자료: 통일부 인도지원국

2002년 대북지원은 9. 11테러사태 이후 조성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정책으로 인해 위축될 우려가 크다. UN은 이미 2002년 대북지원 목표액을 올해의 3.8억 달러에서 2.6억 달러로 매우 낮게 설정하였다. 최근 북한과 수교관계를 맺은 서방국가들이 관계개선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개별국가들의 참여는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북미관계가 개선국면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대북지원 규모가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내의 대북 지원활동은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정책에 탄력을 받아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나 국제정세 및 총선, 대선정국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북 지원활동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라. 인권문제

북한은 인권이 국제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신성한 권리라고 인정하고 있으나 문화적 예외주의와 상대주의를 견지하는 등 인권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이중성은 2001년도 북한 인권정책에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국제적 고립탈피, 김

정일 정권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 제고와 지지 확보를 위해 대외적으로는 인권외교를 강화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실질적인 개선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2월에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청산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고, 3월에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행에 관한 제2차 정기보고서를 16년만에 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 주민의 평균수명, 영유아 사망률 및 영양실조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고, 자연재해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식량부족과 의료품 부족 등으로 인한 영양공급문제가 어린이들에게 발생하였다는 점을 시인하는 등 과거와 다른 개방적인 입장을 취했다. 또한 북한은 대표단을 파견하여 제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의 과정에 참석하여 인권이사회의 전문위원들의 관심사안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북한은 사형제도 및 강제수용소 실태, 종교 및 표현의 자유, 여성의 차별문제, 여행 및 거주이전의 자유, 독립적인 비정부기구의 존재여부 등 인권이사회 전문위원들의 질의에는 전면적으로 부인하였으나, 물증이 제시된 공개처형(한 건)에 대해서 이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인권이사회는 20개항의 구체적인 인권상황 개선을 권고사항을 채택하고, 사안에 따라 일년 이내 또는 다음 정기보고서에 개선 조치를 보고하도록 조치하였다. 개선 권고 사안은 주로 법적, 제도적 사안이었으며, 일년 이내 보고 사안으로는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여성 차별에 대한 개선 조치 등이었다.

북한 인권에 대한 문호개방과 관련, 인권이사회는 국제적십자사의 북한 재소자 방문 조사와 국제사면위원회의(AI)의 북한 방문 허용을 요구하였으나, 이들의 입국 허용을 북한의 주권문제로 간주하여 강요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북한은 인권단체들의 여행 허가 요구는 긍

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AI는 인권이사회의 심의에 앞서 발표한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해서 공개 및 비밀처형의 지속, 해외여행규제, 송환탈북자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 절차 없는 가혹한 처벌, 구치소 등 구금장소에서 기아, 질병에 의한 사망자 수가 증대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북한이 독립적인 감시기구의 북한 접근을 촉구하였다.

북한 당국은 유럽연합(EU)과 그 회원국들과의 관계개선의 일환으로 인권외교를 활용하였다. 북한은 스웨덴 룬드대학과 인권세미나를 개최(2001. 6. 11~12)하였고, 벨기에 브뤼셀에서 EU와 인권대화를 가졌다(2001. 6. 13). 이와 같은 일련의 인권외교는 1998년 EU가 북한과의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인권문제 해결을 요구한데서 기인한다. 한편 요한 페르손 스웨덴 총리가 이끄는 EU고위대표단의 북한 방문으로 인권대화를 갖기로 합의한바 있다.

EU측은 북한과의 인권대화 결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으나 북한을 인권대화에 이끌어 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북한도 인권문제보다는 EU와의 관계개선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북한 인권에 대한 자세는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미국은 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북한 인권실태-2000』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실태를 비난하였고, 미국 조야에서도 북한에 대한 인권압력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조야 인사들은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과 폐쇄체제개방 등을 목표로 미국북한인권위원회(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를 구성하였고(2001. 10. 25) 프레드 아이클 전 국방차관이 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이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전직 관료, 외교관 및 영향력 있는 학자로 구성되어 미국의 대북식량지원계획 등 대북정책에도 영향력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 국무

부는 국제종교자유에 관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의 자유가 없는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2001. 10. 26). 미국 국무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화법안(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에 따라 1999년부터 연례국제종교자유보고서 발간하고 있다.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식량난에 따른 가정 파탄, 범죄 및 탈북 등 사회일탈행위 증대와 이에 대한 정부의 가혹한 처벌 등으로 인권침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데이비드 모튼 WFP 북한지부대표는 북한의 식량위기는 주민의 1/3이 기아의 위협에 직면해 있고 1995~96 대기근 이후 200만명이 기아로 사망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북한 주민의 생명권에 대한 위협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헌법은 사법권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 재판관이 판결에 대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있어 제도적으로 사법권의 독립은 기대할 수 없다. 형법은 가혹하여 탈북 또는 탈북기도, 당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외국방송 청취, 반동적인 선전물 소유 등은 ‘반혁명 범죄’로 간주되어 최고형과 재산몰수형이 부과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압력은 부분적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자유권에 대해 일년 이내에 개선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추가 보고를 권고하였다. 북한도 여성 차별 완화 및 북한 내 인권단체들의 국내접촉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한바 있다.

국제사회와의 인권대화가 지속되는 경우에 기대되는 효과는 중국의 모델과 같이 형사, 사법제도의 상호비교 등 인권분야의 교류확대를 통해 국제 규범에 준하는 제도적 개선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부록 > 2001년도 주요 사건일지

- 1. 1 북한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자’ 발표
- 1. 4 북한, 「노동신문」 사설, ‘공동사설을 받들고 올해를 새로운 전변의 해로 빛내이자’ 발표
- 1. 9 북한, 「노동신문 정론」 ‘더 용감하게, 더 빨리, 더 높이’ 보도
- 1. 11 「북적」중앙위 대변인, 제3차 적십자회담 1월중 개최관련 성명 발표
- 1. 15 북한, 대동강맥주공장 착공  
북한·터키 외교관계 설정
- 1.15~19 IAEA, 연변 핵시설 방문
- 1.15~20 김정일, 중국 비공식 방문
- 1. 16 김정일, 중국총리 「朱鎔基」와 회담(상하이)
- 1. 17 김정일, 푸둥(浦東)개발지구·상하이증권거래소 등 참관
- 1.18~19 김정일, 상해 보산강철공사, GM 승용차공장, 화홍 전자유한공사 등 참관
- 1. 20 김정일, 중국 국가주석 장쩌민(江澤民)과 회담(베이징)
- 1.21~23 김정일, 신의주화학장품공장·법랑철기공장·기초식료품공장 등 현지지도
- 1.22~31 일본 육상자위대와 주일미군의 합동지휘소연습
- 1.23 영국 외무성대표단 평양 도착
- 1.24 북한, 「벨기에와의 외교관계설정에 관한 공동보도」 발표
- 1.29~31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금강산)
- 1.30 조선적십자회, 남측 이산가족에 대한 ‘가족·친척 생사 및 주소확인 회보서」 「한적」 전달
- 1.31 제4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평화의 집」)  
조선적십자회,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후보자(200명)의 명단 「한적」전달
- 2. 3 남북, 경협추진위 1차 회담 경협추진위 구성에 관한 합의서 서명 교환



2. 4 유엔아동기금(UNICEF), 북한과 「2001~2003년 협조이행을 위한 종합운영계획서」 조인(평양)
2. 6 북한, 캐나다 외교관계설정 발표
2. 7 북한, 스페인 외교관계 설정 공동코뮤니케 발표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655군부대 및 동부대 관하 여성포중대 시찰 및 중대군인들의 예술소품공연 관람
- 2.7~10 「남북전력협력실무위원회」 실무협의회(평양)
2. 8 제5차 「남북 군사실무회담」(판문점 통일각)
2. 9 김정일,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대표단(단장: 조선담당 부부장 「王家瑞」) 접견 및 오찬 배석
- 2.13 북한, 신의주화장품공장 조업식
- 2.14 김정일, 평안북도 구성공작기계공장과 태천 발전소 현지지도
- 2.15 남북한 적십자사,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후보자(200명) 명단 교환
- 2.21 북한, 미국 신정부의 대북 입장 관련 담화 발표
- 2.21~24 제1차 남북임진강수해방지분과회의(평양)
- 2.21 「조총련」 중앙상임위 의장 한덕수 사망(94세)
- 2.23 제2차 이산가족 생사 주소확인 결과 통보
- 2.26 미국 국무성, 「2000년도 인권보고서」 발표  
주북 캐나다 신임대사 「호워드 로버트 발로취」 부임
- 2.26~28 제3차 남북 이산가족방문단 교환방문(서울~평양)
3. 1 북한, 독일 외교관계 설정 발표
3. 2 스웨덴왕국 수상특사 외무차관 「한스 달 그렌」 일행 평양 방문  
김정일, 방북중인 중국공산당대표단, 상해교향악단 지휘성원들과 주요 배우 접견

- 3. 3 북한, 미국의 ‘조·미기본합의문’ 이행실천 촉구관련 조선중앙통신사 기자회견
- 3. 4 북한, 황해북도 은파군 은파호 발전소 건설
- 3. 5 북한·룩셈부르크 외교관계 설정 공동보도
- 3.10 KEDO 대표단, 북한과의 경수로 제공협정 이행을 위한 고위급협상 참가차 평양방문
- 3.10~14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 일행 평양방문
- 3.10~13 영국 외무성 외무차관 「존 커」 일행 평양방문
- 3.10~11 「직맹」·「민주노총」·「한국노총」등 남북한 노동단체 대표들간의 실무협의 진행(금강산)  
「농근맹」·「농민회총연맹」등 남북한 농민단체 대표들간의 실무협의 진행(금강산)
- 3.13~16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서울, 무기연기)
- 3.13 「일본 원자탄피해조사대표단」(단장: 외무성 아시아오세안국 참사관 「사토 시게가즈」), 평양 방문
- 3.15 남북 적십자사, 남북 각기 300명씩의 이산가족 서신 교환(관문점)
- 3.16 노동신문, ‘오만무례한 내정간섭행위’ 보도, 미국무성의 ‘2000년도 인권보고서’에서의 북한인권 내용 관련 논평
- 3.20 중국공산당대표단(단장: 당 조직부장 겸 정치국 후보위원 曾慶紅) 평양방문
- 3.22 미 국무부 스파이 사건관련 러시아 외교관 50명 기피인물 지정  
김정일, 방북중인 중국공산당대표단 曾慶紅일행 접견 및 평양시 교외에 새로 건설된 家禽목장을 참관  
김정일, 정주영 현대명예회장 사망 弔電 발송
- 3.24 김정일, 정주영 사망관련 조의대표단 파견(단장: 「아·태평화위」부위원장 송호경)
- 3.27~30 「한·미 위기조치반 합동훈련」

- 3.27~28 조선종교인협의회대표·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 실무협의
4. 5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 회의
4. 7 「과학과 세계문제에 관한 퍼그워시대회(※Pugwash: 핵무기 폐기 등을 토의하는 국제회의)대표단」(단장: 명예위원장 「조세프 로트블레트」) 평양 방문
- 4.10 김정일, 인민군 제884 비행군부대 및 관하 여성중대 시찰
- 4.11 김정일, 함흥에서 재일가수 김연자의 공연 관람 및 접견  
김정일, 함흥시 용성기계연합기업소·대형 공작기계공장·성천강전기공장 등 현지도
- 4.14 노동신문, 미국의 북한 미사일위협 등을 구실로 한 국가 미사일방위체계 수립 움직임 관련 논평
- 4.15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2629 군부대 방문 및 동부대 관하 중대군인들의 예술소품공연 관람
- 4.16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3427 군부대 포대대 및 제757 군부대 염소목장 시찰
- 4.17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841 군부대 및 제998 군부대 시찰
- 4.19 김정일, ‘김승환이 지배인으로 일하는 양어사업소의 양어장’ 현지도
- 4.20~26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
- 4.22 북한, ‘과학의 세기’ 제하로 과학기술과 정보산업의 중요성 강조(정론)
- 4.24 북한, 동신1호 발전소 및 형제골·추포 발전소 조업
- 4.25 김정일, 군 창건 69돌 즈음 제671 군부대 방문  
북한, 「전국 당 초급선전일꾼대회」 개최(4.25문화회관)
- 4.26 일본 고이즈미 내각 출범  
정부, 비료20만톤 대북지원발표(5.2~6.5 수송완료)
- 4.30 김정일, 황해남도 안악군·삼천군 토지정리사업 현지도  
「현대아산」 정몽헌 회장 일행 평양 방문

- 5.2~3 EU대표단(단장: 스웨덴 수상 『요한 페르손』) 평양방문 및 김정일 면담
- 5. 3 스웨덴 수상 『요한 페르손』 방한
- 5. 5 KEDO 대표단, 경수로대상 제공협정 이행을 위한 고위급 전문가협상 참가후 평양 출발
- 5. 7 주북 스페인 및 네덜란드 신임대사 부임  
김정일, 제415군부대·제567군부대 방문 임진강 제1발전소
- 5. 8 김정일, 제688 군부대 시찰 및 제233 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 공연관람
- 5. 9 미 국무부, 리처드 아미티지 부장관 방한
- 5.10 김정일, 인민군 제224 군부대 관하 포중대와 제230 군부대 관하 포중대 시찰, 황해남도 배천군 수원협동농장 현지지도
- 5.11 북한, 당 역사연구소장 강석승 사망(68세)
- 5.12 북한 평양에 건설된 현대적 컴퓨터생산기지, 생산개시
- 5.13 김정일, 제243군부대 관하 포중대·제534군부대 메기공장 시찰 및 황해남도 과일군 과수종합농장 신대농장·포구농장·용수포해수욕장 등 현지지도
- 5.14 유럽동맹의 對北 외교관계 설정 결정
- 5.16 북한, 지리정보체계 “금수강산” 1판 완성
- 5.17 북한,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 미국 비난  
러시아 공산당대표단, 평양 도착
- 5.18 김정일, 제1129 군부대 및 제851 군부대 시찰
- 5.19 김정일, 제863군부대 관하대대 시찰
- 5.20 김정일, 해군 제256군부대 시찰
- 5.22 IAEA 대표단, 미·북기본합의문 이행 관련 제16차 협상차 평양방문
- 5.23 김정일, 『제4차 군인가족 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제324·567군부대의 군인가족 예술소조공연 관람

- 5.23~27 리핑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한
- 5.24 김정일, 함경남도 함흥시 청년염소목장·함흥농장 분장 현 지지도, 제173 군부대 시찰  
조총련 중앙위, 제18기 5차회의 개최(동경, 조선문화회관)
- 5.25 김정일, 제826군부대 및 同부대 관하 2중3대혁명붉은기 중대 시찰
- 5.26 조총련 제19기 전체대회를 통해 의장(서만술)·책임부의장(허종만) 등을 선출 및 제19기 1차회의
- 5.28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돌 즈음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기 위한 정당·단체 합동회의」 진행(인민문화궁전)  
북한 슬로바키아 정부와 의정서 새로 조인
- 5.29 「핵전쟁방지 국제의사조직」(※IPPNW)대표단(단장: 공동의장 「메리와인 애쉬포드」) 평양방문
6. 2 스페인 외무부대표단(단장: 외무차관 「미켈 나달」) 평양방문
- 6.3~4 북한상선 4척 제주해협 영해와 북방한계선 무단 통과
6. 9 북한 당 중앙위 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최원익(※강원도당위 책임비서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사망(73세)
- 6.15 남북공동선언 1돌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금강산)
- 6.16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돌 기념 남북불교도 동시법회 개최  
미·러 정상회담(슬로베니아)
- 6.18 북한, 부시 미대통령 대북협상 재개성명 관련 담화 발표
- 6.19 천도교 중앙총부 김철 교령 일행 평양 방문
- 6.19~22 이한동 국무총리 중국 방문
- 6.21 김정일, 제983 군부대 시찰 및 제567 대연합부대 메기공장 시찰

- 6.24 국제민간법정인 코리아국제전범재판 개최(뉴욕)
- 6.25 김정일, 오중흠 7연대칭호를 수여받은 근위 제1보병사단 시찰
- 6.30 미·일 정상회담(워싱턴)
- 7. 1 김정일, 중국공산당 창건 80돌 즈음 연회참석차 주북 중국대사관
- 7. 5 부시 미대통령, 대북 증유제공 2천만달러 승인
- 7. 6 뉴질랜드 친선대표단(단장: 『그라함 켈리』) 평양 방문
- 7.11 김정일, 황해북도 범안양어장·범안 발전소 및 범안협동농장의 문화주택마을 등 현지지도
- 7.11~14 김영남, 베트남공식방문
- 7.13 중국 북경 2008년 올림픽 개최지 결정
- 7.15~18 중·러 정상회담(모스크바)
- 7.16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
- 7.17~20 김영남, 캄보디아 공식방문
- 7.22 미·러 정상회담(제노바, G-8 정상회의)
- 7.24~25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무장관회의
- 7.26 북 외무상 백남순, ARF참가 EU대표와의 회담(※7.25, 하노이)을 통해 ‘북-유럽동맹간 외교관계 설정에 관한 공동 보도’ 발표
- 7.27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방한
- 7.29 김정일, 푸틴대통령 초청 러시아연방 공식방문
- 8. 4 『조·러 모스크바선언』 8개항 발표(모스크바 크레믈린궁)
- 8. 8 김정일,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비공식 상봉
- 8.13 일본 고이즈미 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
- 8.14 유엔 인권소위원회 제53차 회의 북한 대표 종군위안부문제 관련 연설
- 8.15 남측대표단(단장: 김종수, 220여 정당·단체대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평양방문,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 진행(조국통일3대현장기념탑앞)

- 8.16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폐막식 및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경축야회 진행(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앞)
- 8.18~19 「축전」 남측대표단,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및 묘향산 지구 참관
- 8.19 김정일, 함북주둔 제 696군부대 시찰 및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 방문
- 8.20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남측대표단, 주체사상탑·애국열사능·쑥섬혁명사적지·단군릉 등 참관
- 8.21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북, 남, 해외 공동보도문」 발표
- 8.21~25 KEDO 대표단, 경수로대상제공협정의 이행을 위한 고위급 전문가협상 참가차 평양 방문
- 8.23 황남소재 장수산유원지 건설 완공
- 8.28~29 UN 식량 및 농업기구 총국장 「자크 디우프」 평양방문
- 8.28 김정일, 제2796 군부대 관하 전연초소 시찰
9. 1 북한, 대북 경수로사업 건설허가증 발급
9. 2 「조평통」 부위원장 임동옥, ‘남북 당국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제의 방송통지문 발송
9. 3~5 중국 장쩌민 국가주석 평양 방문 및 김정일과 정상회담
9. 7~11 주룽지 중국총리 상트 페테르부르크 방문 및 중·러 총리 회담
9. 8 북한정권 창건 53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4.25문화회관)
- 9.11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821·368 군부대 및 제757 군부대 염소·끼목장 등 시찰  
미국 뉴욕 무역센터 비행기 연쇄테러
- 9.14 대북 경수로사업 기초굴착공사 개시
- 9.14~15 김정일, 함경남도 철도공장·발전소 현지지도
- 9.15~18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 9.16 김정일, 인민군 제 194군부대 시찰
- 9.18 김정일, 제535군부대 관하 구분대와 오중흡 7연대 칭호 제211군부대 시찰
- 9.18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발표
- 9.19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 미국방문  
김정일, 김책공업종합대학 현지지도
- 9.23 김정일, 제534군부대 메기공장과 황남 과일군 북창농장·풍천과일가공공장 등 현지지도
- 9.25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각기 후보자 200명 명단 교환 (판문점)
- 10. 3 단군민족통일협의회(회장: 유미영), 개천절 즈음 단군제·평양시 예술인들의 민족예술공연 등 기념행사 개최 (단군릉)
- 10. 4~5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1차 「남·북당국간회담」
- 10. 8 일본 고이즈미 총리, 중국방문 및 장쩌민과 회담
- 10.12 「조평통」 대변인, 제4차 이산가족상봉사업·태권도시범단 파견 당분간 연기 및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등의 개최장소를 ‘금강산’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담화 발표
- 10.13 「북-일 농업교류 일본협회」 결성
- 10.15 일본 고이즈미 총리 방한
- 10.15~2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 10.18 북-베트남 경제 및 경제과학기술협조위 제4차 회의 합의서 조인(평양)
- 10.18~22 김대중 대통령, APEC 정상회담 참석차 중국방문(상해)
- 10.20 「조평통」 서기국, 남북대화 관련 환경·분위기 조성 및 북측 제의 회담일정 수락 촉구
- 10.21 APEC 정상회담 반테러 공동성명 채택
- 10.24 북측대표, 제56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10.17) 연설 (※미국측이 북한미사일위협문제를 중심으로 MD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



- 10.25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장, 남측 수석대표에 “회담장소를 금강산으로 할 것을 거듭 주장”하는 전화통지문 전달
- 10.27~28 중 후진타오 국가부주석 방러
- 10.31 북한대표, 유엔총회 제56차 회의 전원회의(안보이사회 안건)에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의사” 표명
11. 3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장, 제6차회담관련 남측제외(※11.9~12, 금강산) 수락 전화통지문 발송  
북한, KCNA기자회견을 통해 「테러 재정지원 금지 국제협약과 인질반대 국제협약의 반테러 국제협약들」에 가입키로 결정
11. 4 김정일, 함북 무산광산연합기업소 현지지도
11. 6 김정일, 제264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관람
11. 7 김정일, 칠보산 유원지 현지지도
11. 9~12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금강산여관)
- 11.10 김정일, 「112호 닭공장」 현지지도
- 11.12 김정일, 제397군부대 시찰
- 11.12~14 미·러 정상회담(텍사스)
- 11.13 독일정부의 대북 지원물자(※수천톤의 냉동소고기) 기증식(남포항)
- 11.14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북측대표단, “남측의 무성의와 남측 수석대표의 전횡과 불순한 태도 등으로 이번 회담이 결실 없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성명 발표  
WTO 제4차 각료회의 뉴라운드 출범
- 11.16 황남 봉천군, 현대적인 메기공장 건설 완공
- 11.17 WHO 사무총장 「그로할렘 부룬틀란트」 일행 평양 방문
- 11.19 북한, 주유엔 상임대표에 박길연(※외무성 부상) 임명  
세계보건기구 평양대표부 개소식 진행(평양)  
중국 WTO 가입안 승인

- 11.22 북한 로동신문 사설, ‘라남의 봉화따라 강성부흥의 북소리 높이 올리자’ 제하 강성대국 건설 매진 촉구
- 11.26 유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종합 협조 호소문’ 발표
- 11.30 북한 로동신문 2만호 발행 기념 중앙보고회 진행(인민문 화공진)
- 12. 1 스웨덴 특별사절단(단장: 『보리에 옹그린』)  
일본 조총련 중앙본부 강제수색
- 12.1~4 KEDO 사무총장 『찰스 카트만』 평양방문
- 12. 2 북한, 영변 핵관련 시설 사찰 허용 발표
- 12. 3 KEDO-북한, ‘품질보장 및 보증의정서’ 서명·발효
- 12. 4 북한, 대흥단군 감자종자처리장 건설완공  
큰물피해대책위 대변인, 『유엔의 인도주의종합 협조 호소문』(11.26)과 관련 감사표시 담화 발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미군의 용산기지내 아파트건립 강행 규탄 성명 발표
- 12. 5 김정일, 주북 러시아 신임대사 『안드레이 카를로프』 접견
- 12. 8 주북 캐나다 신임대사 『조세프 카론』 및 국제고려학회대표단(단장: 부회장 이순안) 등 평양 방문
- 12. 9 북한, 청년동맹 일꾼회의 개최(청년중앙회관)
- 12.10 『국제고려학회』 평양지부 창설식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용산기지내 미군아파트 건설추진 반대 성명발표
- 12.11 자강도 소재 ‘고풍1호’·‘고풍2호’ 발전소 조업식  
그리스도교연맹 위원장 강영섭, 한국그리스도교회협의회 김동완 총무 ‘성탄절 맞이 공동보도문’ 발표(평양)
- 12.13 홍성남 및 내각 위원회·성·중앙기관·연합기업소 책임일꾼들, 나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 참관
- 12..14 금진강 발전소 언제 마감막이 공사 완공

- 12.14~16 김정일, 평안북도내 북창기계연합기업소·수풍발전소 지하 발전직장 등 공업부문 사업 현지도
- 12.15 『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대책위』, 일본당국의 조총련 등에 대한 탄압행위 규탄 성명발표
- 12.17 『조평통』, 대변인, 남측의 비상경계조치 지속 관련, “북남 관계 정상화를 위한 남측의 전환적 조치” 등 촉구 담화 발표
- 12.17~30 북한 경수로 관계자 및 시찰단 20명 방한
- 12.18 북한, 주미 일본대사 “대량과괴무기 관련 대북사찰” 발언 등 비난
- 12.19 『법정학련』, 북측본부 대변인, 『한총련』 관계자 등에 대한 실행선고 관련 규탄성명 발표
- 12.20 방글라데시 주재 신임 북한대사 강창렬 임명보도(중방)
- 12.21 김정일, 제529군부대 시찰
- 12.22 김정일, 제2833군부대 시찰 및 제529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아프간 임시정부수립  
일본 순시선, 정체불명 선박에 기관포 사격 동중국해 침몰
- 12.24 김정일, 자강도 소재 8호제강소 및 홍주청년발전소·강계 포도술공장·강계편직공장·강계닭공장·강계고려약공장 등 현지도
- 12.25 강원도 법동군 소재 여해 2호발전소 준공식 진행
- 12.26 북한, 국적불명 선박 “북 간첩선” 추정보도 관련 대일 비난
- 12.27 김정일, 인민군 제646군부대 방문 및 제564대연합부대 건설 1227호발전소 시찰  
북한, 아프간 임시정부수립 관련 환영 기자회견 발표